

의료·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 8~9, 12~13 면

노동조건 공격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 6 면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라

▶ 4~5 면

동아시아는
1차 대전 직전의
유럽과 비슷한가?

▶ 18~19 면

파업의
효과와 의의

▶ 17 면

불안정과 긴축의
2014년 세계·한국 경제

▶ 20, 24 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인쇄인: (주)아이에디 이승철
등록번호: 서울다08179 (경주2)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제보: 02-777-2791 E-Mail: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20호 | 2014년 2월 10일 ~ 2월 23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민주노총 파업을 지지하라

민주노총은 주장한다

-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 철도 노조 탄압과 민영화 중단하라
- 공공부문 '정상화'는 노동자 조건 공격이다
- 시간제 일자리와 파견제 확대 반대한다
- 통상임금 정상화하라 •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라
-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기자들이] 사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방을 나가는 장면을 보여 주는 호텔 감시 비디오를 갖고 있다.”

소치 올림픽을 취재 온 해외 기자들의 호텔 시설 불평에 답변하던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코작, 무심결에 러시아 정부가 기자들을 감시한 것을 인정한 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내의 한국인 매춘부를 일제히 강제 송환시키자.”

막나가는 일본 우익

“우리는 [값싼 복제약이 허용되는] 인도 국민들을 위해 약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값싼 지불할 수 있는 서구인들을 위해 개발했다.”

제약회사 바이엘 CEO

“이명박은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큰 탐닉에 빠지지 않을 사람”

청와대 새 대변인 민경욱, 2007년 대선 당시 KBS 시사보도팀 기자 시절

“[이석기 의원 행방이] 20년도 사실 적다.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새누리당 김진태, 내 주위에도 김진태를 가두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는]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여민이 2차 피해자”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전 환경부장관 윤진숙, 이것이 박근혜가 “모래밭 속에서 찾은 진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 전 경찰청장 김용판, 무죄 선고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실의 은폐를 은폐하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의무를 갖고 출판하고 있다. 제대로 양심 있는 교장들은 다 그 교원노조 놈들이 막 하니가 귀찮아서 아이구~ 말걸 버리고 마는 것”

교회사 회장 양철우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장남감사 달라고 졸랐다. 유해하고 때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못사 준다고 했다. 엄마가 불통한 건가. 사 주면 또 사 달라고 할 것 ... 철도 민영화를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걸 못 믿겠다고 하고 파업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불통 아닌가.”

새누리당 이장우, 이걸 그냥 학 그냥 막 그냥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좀 여러 채 사서 임대도 놓고 월세도 놓고 전세도 놓는 이런 구조를 좀 용인하는 쪽으로 가야”

영원히 임대, 월세, 전세 살라는 <헤럴드경제> '부동산 전문가'

“누가 이 영화를 가로막는 걸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관 확보조차 쉽지 않자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하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이 글은 2월 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2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1백53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은 법정에서 다시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량 해고의 이유,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하고 회계 조작도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셈이다.

2009년 쌍용차는 1백53명을 정리해고한 것을 포함해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으로 무려 2천6백46명의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냈다. 대량 해고 이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더하면 3천여 명이 해고됐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 뒤 고통에 몸부림치던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해고는 살인이다’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만 것이다.

그간 쌍용차 사측은 생산량이 2009년에 건줘 3배가량 늘어나고 판매량이 연일 늘어나는데도 복직 요구를 무시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박근혜 정부도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치고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투쟁의 의지를 꺾



함께 살자, 함께 웃자 2013년 6월 7일 H-20000 모터쇼에서 활짝 웃는 쌍용차 노동자들.

지 않았고 무려 5년 동안 싸워 왔다. ‘함께 살자’는 외침에 수많은 학생·노동자들이 지지와 연대로 답하며 쌍용차 투쟁은 사회적 의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5년간의 투쟁 끝에 내려진 단비 같은 승리 소식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 투쟁을 몰심양면 지

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복직 요구를 외면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려는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즉각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해고 노동자들을 모두 복직시

켜야 한다.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살인 해고’의 책임자들은 처벌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쟁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징계해고자와 비정규직 해고자도 공장으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대표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신문 판매를 위해 모이기만 해도 집회라는 것이다. “[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이고] ...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특히 미신고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문 판매가 위협하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집회 신고 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 ... [집회 신고제]의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우려대로 현실에서는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래서 이번 판결은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레프트21> 측이 불가피하게 내고 있는 집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방해한 적이 있다. 경찰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레프트21>의 강남역 판매를 ‘불허’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의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신문 판매를 집회로 판결한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아마 저들은 철도 파업 등 노동자 운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주장하는 <레프

트21>이 위축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곳곳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를 비판하고 노동자 운동의 승리를 위한 주장을 내놓을 것이다.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로 가편은 2월 24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주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로 가편은 2월 25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8:30~19:3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로 가편은 2월 26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로 가편은 2월 27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 대학 공개판매는 겨울방학 동안 쉽니다.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안드로이드 앱 출시

새 온라인 기사와 신문이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레프트21>의 최신 기사를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evF3xg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민주노총은 2월 25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항의이자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자 공격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공언했는데,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공격은 곧 민간부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광범한 대중을 겨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에서도 확고히 기업주 편을 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한술 더 떠, 체불임금 청구 불허,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 적용,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님 등의 어처구니없는 ‘지도지침’을 내놨다.

조바심

박근혜는 ‘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집을 올린다)로 당선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다 내팽개쳤다.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파견제 확대 등과 함께 저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더 한층 쥐어짜려고 위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년 전 한국 지배계급이 일찌 단결해 박근혜를 밀어준 이유다. 지금 이들은 신흥국의 위기와 중국 경기의 둔화를 보면서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을 내리고, 철도파업에 강경 대응하며 급기야 민주노총 본부까지 습격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탄압도 경제 위기 책임 전가와 쥐어짜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책을 관철하려면 이에 저항할 가장 효과적인 세력인 노동운동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게 이 과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 지배계급은 박근혜가 한국판 마거릿 대처가 돼 주기를 바라지만, 박근혜는 대처와 처지가 조금 다르다. 대처는 노동계급의 주요 부문들을 하나하나씩 각개격파하는 전략으로 성공했지만,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심도가 더 깊어 노동계급 주요 부문을 하나하나 고립시켜 공격할 만한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당시 영국 노동계급은 1970년대 중후반 잇따른 노동운동의 패배와 그에 따른 좌파의 사기 저하를 겪고 있었지만, 한국 노동운동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 운동은 지난 두어 해 동안 자신감을 회복해 왔다. 박근혜 당선 이후 노동자들 사이에 일시적 낙담이 있었지만 이런 추세를 꺾지는 못했다. 상반기에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선봉 지난해 철도 파업은 오랜만에 '노동'의 주도력을 보여 줬다.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1월 9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현대차 특근 거부 등 기존 조직부문이 투쟁했을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택배,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새로운 노동자 부문이 등장해 나머지를 고무했다. 특히 하반기에 노동운동은 중요한 전진을 이뤘는데, 전교조 교사들의 규약시정명령 거부와 철도파업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철도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반감에 초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철도파업은 불통 박근혜 정부를 진정할 위기로 몰아넣었다. 가스 민영화 법안 저지부터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률 0퍼센트대까지 여기저기서 철도 파업 덕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전선의 선두에서 '인민의 호민관' 구실을 했다는 점은 조직노동자 운동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각인시켰다. '노동'의 주도력이 오랜만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자신감

올해 노동자 투쟁은 지난해보다 좀더 활발하고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올해 투쟁을 개막했고, 보건의료노조도 의료민영화 저지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나 통상임금 같은 폭발력 있는 쟁점들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올해 노사·노동 갈등이 증폭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특히 기업주들의 걱정이 크다. 경총은 주요 회원사 23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 기업의 76.3퍼센트가 2014년 노사관계가 2013년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런 투쟁들이 한데 모여 힘을 다지고 자신감을 끌어올리며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철도노조는 2월 25일 2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급속노조는 2월 17~19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데, 활동가들은 무리 없이 찬성이 다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총파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거나 '진입 거부 이상의 실질적 파업이 돼야 한다'는 투쟁성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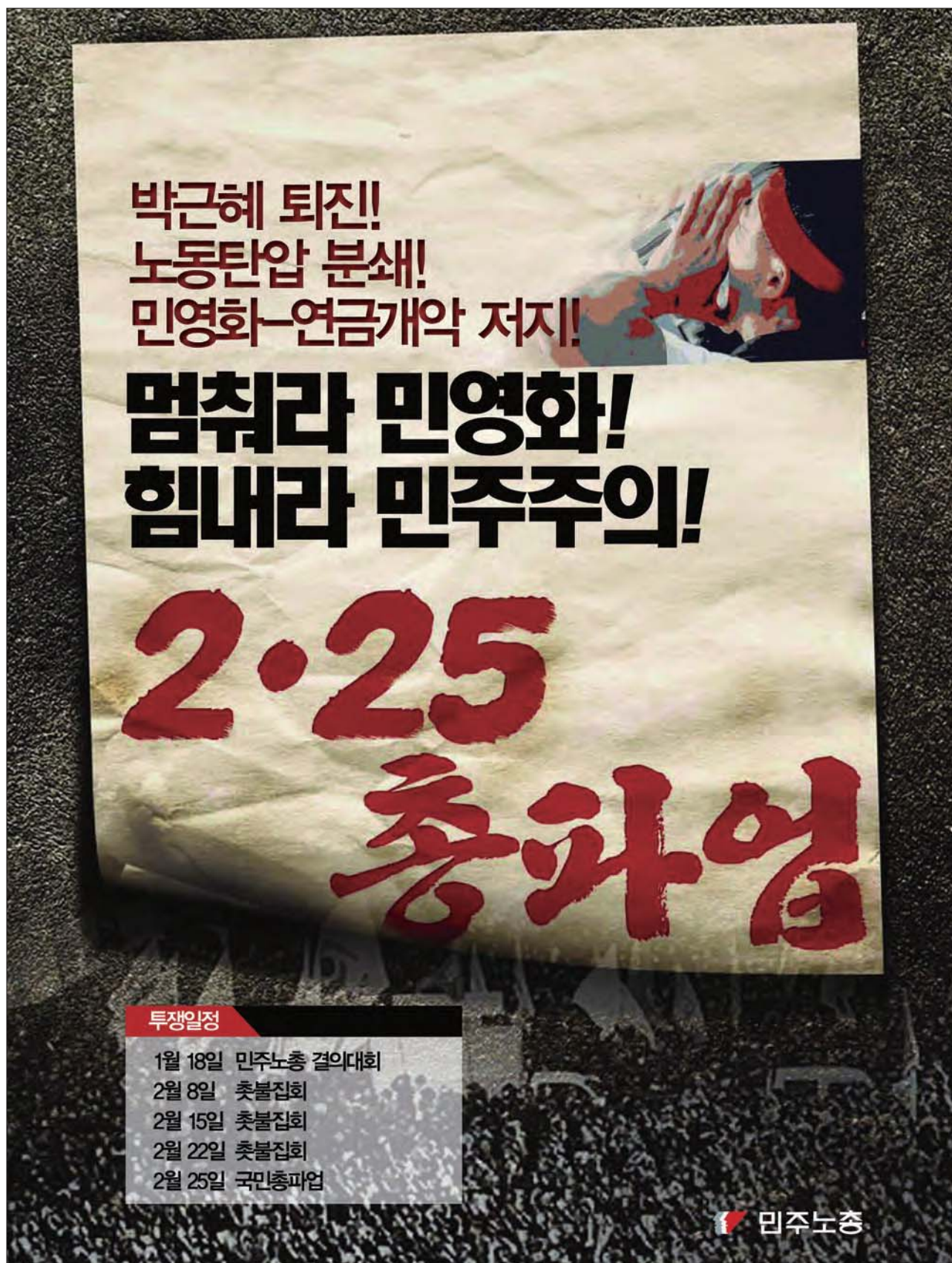
공무원노조 등도 상당수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선 저항의 선두에서 강력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연말에 그랬듯이 학생, 청년, 미

조직 노동자를 비롯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대중으로부터 광범한 사회적 연대를 얻을 수 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은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박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때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지어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정기상여금마저 통상임금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니, 낱강도가 따로 없다. 경총의 나팔수로 나선 “법조계의 삼성” 김앤장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노동부는 전형적인 기업의 이윤 보호 논리, 즉 ‘신의칙’ 적용 시점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신의칙을 들어 전원합의체 판결일(지난해 12월 18일)까지의 체불임금 청구를 불허했는데, 노동부는 그 시점을 새로운 임금·단체협약 체결 때까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조들의 잇단 소송 청구를 막고 기업주들에게 교섭 지연과 쫄음의 시간을 벌게 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력도 없는 정부의 억지일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임금 수백조 원을 흡수한 자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체불임금 청구 때문에 기업들이 다 망할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지만, 지난해 삼성·현대를 비롯해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 4백47조 원이나 났고, 주요 기업 총수들은 주식 배당금으로만 수십~수백억 원씩을 챙겼다. 이 금액이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지난 3년치 통상임금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투쟁 저들의 임금 축소 시도에 맞서야 한다.

전부 지불하고도 천문학적인 돈이 남는다.

더구나 신의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규정(강행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일부 대법관들조차 “신의칙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마땅히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막무가내로 입단협이 없는 무노조 작업장에선 취업규칙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은 만료시점도 없고 개별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영원히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입단협 “필승 카드”

한편, 노동부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재직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다. 정부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될 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퇴직자들에게까지 정기상여금을 일괄(날짜를 여럿으로 갈라서 배정함)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요건’을 이유로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더니, 이제 노동부가 한 술 더 떠 정기상여금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사 합의가 어땠든 관계 없이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들에게도 근무일수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도 인정했다.

노동부가 이런 법원 판례들조차 무시하며 ‘재직 요건’을 들먹인 이유는 명백하다. 만약 노동부 지침대로 하면, 현대차를 비롯한 전국 작업장 세 곳 중 두 곳에서 통상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노동자들에게 연간 수조 원의 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당들에도 ‘재

직 요건’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풀어 준 빚장을 더 활짝 열어 찢었으니 말이다. 실제로 이미 “사용자들은 올해 입단협 필승카드로 ‘재직요건 최대 확보’를 꼽고 있다.”(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편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이번 지침이 “사용자들의 임금 삭감 안내서”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이렇듯, 지금 박근혜 정부와 자본가들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임금 뿔을 줄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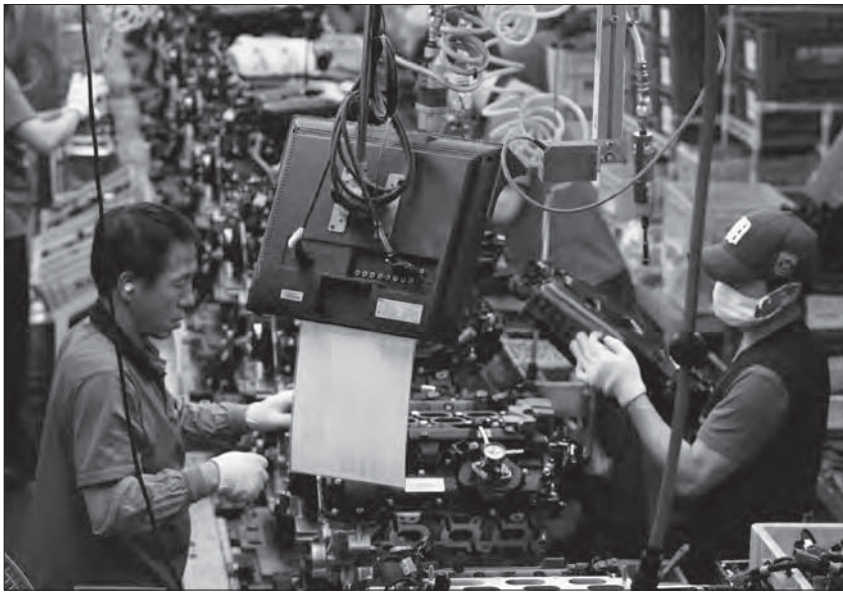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제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제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연공급제”로 인해 임금 결정에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훈선이 조래”됐다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바로 정부와 기업주들이 저임금·장시간 임금체제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온 데 있다.

노동부는 지난 수십 년간 자체 예규를 통해 1개월 주기로 지급된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왔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주들은 연장·야



성과·직무급제는 노골적인 임금삭감·노동조건 악화 정책이다.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간·휴일근무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 고용 없이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쥐어짜다. 턱없이 낮은 기본급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몸이 축나고 생명이 단축되는 것도 감수하며 야근·특근에 시달렸다.

노동부가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것도 웃지 못할 적반하장이다. 임금 도둑질을

중단하랬더니, 오히려 연공급제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게 문제라는 식이니 말이다.

정부는 위선적이게도 “장시간 근로가 문제”라며 노동자들을 격정하는 척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직무·성과급제는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임금 유연화

대표적인 성과 중심의 임금제도로 꼽히는 연봉제는 2000년대 한국에 본격 도입된 이래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반했다. 성과 경쟁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추가 근무수당 없이도 야근·특근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직무·성과급제가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직무급제는 합리적’이라는 정부의 포장과 달리, 이 제도는 직무에 따른 임금 차별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한국의 보편적인 직무급제 유형인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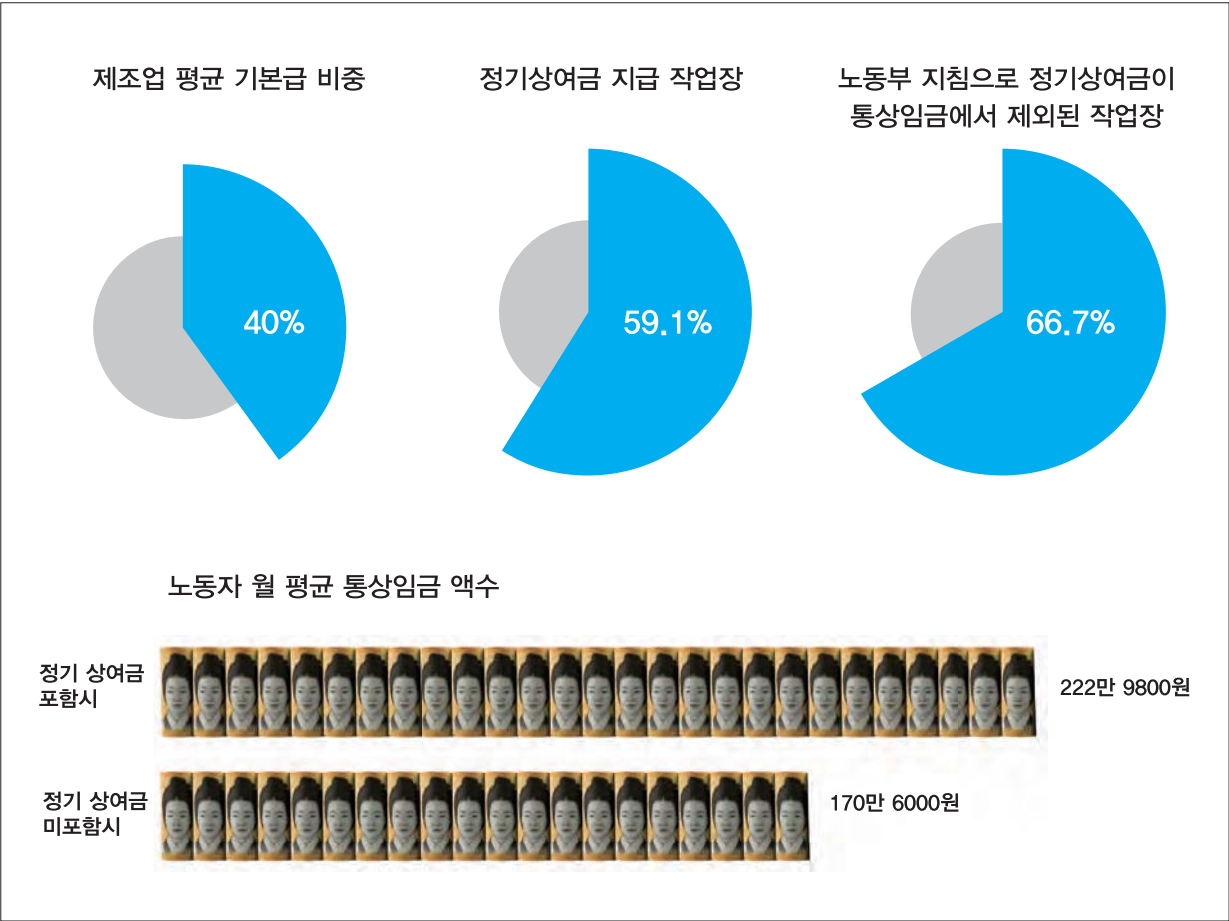
리는행식 분리직군제(무기계약직의 별도 직군)를 보라. 기업주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무를 회피하고 ‘생생 낮은 처우’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급제를 활용했다.

성과·직무급제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며 임금·노동조건 수준을 끌어내리는 노골적인 임금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임금체제 개편 모델은 이미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노동부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이 때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임금체제를 다변화해 생산성이 낮으면 가져없이 임금을 깎아 버리라는 것이다. 유수 작업장의 노동자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가는 오늘날,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과 임금 유연화로 내몰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직무급제 확대 시도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혈안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뒷받침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뜯어 고치고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등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들의 임금 축소 시도에 노동자 운동은 반대해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는 배(기본급)보다 배꼽(각종 수당·상여금)이 더 큰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온 지배자들의 탐욕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빼앗긴 임금을 되찾는 정당한 행동이자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노동시간 단축의 단초도 제공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것은 임금 유연화가 아니라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고 월급제를 실시해 야근·특근에 시달리지 않아도 기본급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연공급제를 지키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아쉽게도 진보진영 내 일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공급제를 비판한다. 하지만 연공급제 지키기를 ‘정규직의 기득권 지키기’ 취급하는 것은 옳다.

오히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요구 투쟁이 보여 주듯, 연공급제 확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공급제를 깨릴 게 아니라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연공급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자신의 연공급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인상을 옹호해야 한다.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총 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쟁”의 시작을 알리며, 2·25 파업의 4대 의제 중 첫째로 통상임금 요구를 내세웠다.

이처럼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 임금 투쟁을 벌인다면, 이는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주고 투쟁의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은 결코 ‘배부른 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정규직 노조가 통상임금을 되찾고 기본급 인상과 월급제 시행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성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유리하다. 특히,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대폭 오르고 장시간 노동이 줄어야 신규 고용도 늘 수 있다.

기본급 인상과 월급제 도입은 산업·특근 등의 장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노동시간 단축 투쟁, 예컨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나 자동차의 주·야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서도 임금 하락을 줄일 토대를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임금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선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사측을 편들며 나선 지금, 계급 간 세력 관계에서 우리 쪽의 우위를 확고히 할 기층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사실 지난해 노동운동은 이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박근혜가 GM 사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통상임금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법원은 법리 그 자체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해 주요 노조들이 법적 대응에만 머물지 말고 투쟁을 조직해 법원과 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법적 소송보다는 투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지금 더 명백해졌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온 첫 판결에서, 부산고법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며 노동부 지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선다면, 우리 쪽에 얼마든지 승산의 기회는 있다. 노동부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입단투에서 얼마나 강력히 맞서느냐에 따라 지난 3년치 체불임금도 돌려받고 앞으로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25일 민주노총의 파업은 이런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운동의 투사들은 자신이 속한 작업장과 산별·연맹 등에서 이번 파업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대한 ‘희망퇴직’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2백 50여 명이 직장을 떠났다. 사무지회 이재수 교섭실장은 “안 그래도 신차 투입 계획과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의 위기감도 커져 왔다”고 말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1년 대우차 부도 때 사무직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당했어요. 몇 년 동안 3천여 명 정도가 회사를 떠나야 했죠. 당시에 우리는 무방비로 당했어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사무지회가 만들어졌고 2012년에 생산직과 노조가 통합되면서 조합원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측의 이번 공격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희망퇴직’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이 구조조정의 첫 시작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뻔한 것 아닌가” 하고 말했다. 지부 집행부에 “구체적 액션 플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실질임금 삭감

실제로 위기는 사무직을 넘어 전 공장에 퍼져 있다.

이미 군산공장에선 조업 단축이 계속됐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고통을 겪어 왔다. 마침내 사측은 지난달 현행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전환하고 1천1백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 이 계획이 재논의되고 있지만, 올해 생산계획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2교대제 유지를 위해 어떤 공격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산공장은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 2교대제를 유지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적잖은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평공장에서도 한 업체가 ‘희망퇴직’ 형식으로 6명을 해고했는데, 군산공장뿐 아니라 부평에서도 비정규직이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는 부평공장 생산직 정규직을 향해서도 번져 가고 있다. 노동

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선 이미 1·2공장 통합설, 2공장 인력감축설 등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얼마 전 현장에 복귀한 김성열 전 금속노조 감사위원은 부평공장의 현실에 대해 말했다. “중대형 차들을 생산하는 부평 2공장은 당장 일이 없어요. 생산 물량이 없으니까 지난해 말부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놀아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퍼센트만 받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15년엔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든 차종이 종료돼요. 구형차들이 돼 버리는 거죠. 이미 신차 계획이 있어야 하고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돼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2015년에는 생산할 차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는 글로벌 경쟁을 유도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지엠 본사를 비판했다. “지엠은 국제적인 경쟁을 유발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 공장들끼리 단가 경쟁을 시키는 거죠. 미국의 한 공장에선 신규 입사자에게 임금을 50퍼센트 삭감했어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선 공장까지 폐쇄해 버렸죠.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01년 대우차 부도로 대규모 정리해고의 고통을 경험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야금야금 지속된 노동조건 후퇴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 불만도 커져 왔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2012~13년 입단협에서 다시금 파업에 나서며 잠재력을 보여 준 바 있다. 비록 이 투쟁에서 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안고 투쟁을 매듭지었지만, 사무직 노동자들이 연봉제에서 연공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일부 성과도 만들어 냈다.

무엇보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조정에 맞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은 금속노조의 2월 25일 파업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그만큼 이번 파업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을 시작할 좋은 기회일 것이다. 노조 집행부 간부 수준으로 집회 참가가 제한되지 않았으면 한다.

사무직에 대한 ‘희망퇴직’,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압력,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압박, 군산공장에서 가시화될 구조조정 등에 맞서 실질적인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박설



구조조정 등에 맞선 실질적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 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스럽게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공공기관에 대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다그치는 배경에는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위기, 흔들리는 중국 경제 등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도 억제해 노동계급 전체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철도 파업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밀어붙인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대표 본보기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곳,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20곳을 꼽아 부채와 복리후생비 삭감 계획을 내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부채 감축 계획"은 부채 비율이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수준(현재 2백20퍼센트)이 되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를 30퍼센트나 더 낮춰 잡아 오라고 요구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퇴직금누진제 금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금지 등 그 삭감 규모가 매우 큰 것들도 포함돼 있다. 복리후생비는 노동자 임금의 일부이고 임단협 사항이므로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 징계와 구조조정, 전보 등에 대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런 독촉으로 38개 중점관리 기관들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행계획의 내용은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우려했던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 공공서비스 축소, 노동자 임금 공격하기

부채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부채를 40조 원가량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이 주된 방식으로 제시됐다.

LH, 한국전력 등 부채 감축 계획 규모가 큰 곳들은 임대주택이나 발전 시설 건설 등을 축소하거나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심 공공재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채 감축 압박은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낳을 것이다. 사업 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동반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사업 조정"의 주된 방식으로 민간 자본 유치 계획을 내놨는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며 공동 사업을 벌이는 것은 향후 민영화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민영화 시도가 계속됐던 전력·가스 부문에서 민간 자본 유치를 사업 재조정 계획으로 제출한 것은 우려스럽다.



상반기에 시작되는 경영평가부터 조직적으로 잘 대응해야 하반기 파업도 잘할 수 있다 1월 23일 열린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공동선언 대회.

공공부문 공격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기 위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산 매각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철도공사는 적자선을 매각하고 인천공항철도도 민간자본에 되팔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에 제출된 자산 매각 계획의 상당 부분은 공공기관 부지와 사옥 매각이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가지고 있는 땅을 급히 팔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쏟아지게 될 부동산 매물만 7조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일제히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제값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부지를 노리고 있는 재벌들만 알짜 공공재산을 싼값에 가져가는 특혜를 누릴 것이다. 가령,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 매각은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고, 가스공사 등의 해외 자원 개발 지분 매각도 결국 SK나 LG 같은 에너지 대기업들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정상화 계획'은 수익 극대화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금 인상을 낳을 것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기관 노동자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에 비해 1백44만 원 줄어든다. 특히, '방만경영기관'으로 꼽힌 20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백88만 원이나 줄어든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과도"하다고 지적된 복리후생비를 다 모아 봤자 총 1천6백억 원가량으로, 중점관리기관의 총 부채 4백11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약 0.036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것은 '공공기관 노동자가 방만해서 부채가 늘어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비정상'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엉뚱한 책임 전가이며, 순전한 거짓말임을 보여 준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뻣뻣한 총액인건비 통제 때문에 임금 인상을 제대로 못 해 왔는데, 복리후생비마저 뺏긴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

정부의 파상 공세에 맞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38개 중점관리노조는 특별대책위까지 결성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노동조합들은 각 공공기관별 '정상화 대책' 추진에 참여하지 않고 일체의 개별 교섭을 거부하기로 했고, '정상화' 추진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줄 세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겠다고 공동 결의했다.

임금 교섭 돌입 시기를 집중해서 쟁의 행위에 함께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상화 대책' 완료 시점으로 잡고 있는 하반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노조 활동가들은 이명박의 '공공부문 선진화' 당시 노동운동의 대응을 돌아보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당시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정책 연대로 발목이 묶였고, 민주노총도 작업장별로 각개 대응하는 데 그쳐 '선진화'를 잘 막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임단협 개약을 시도하고 경영평가를 시작하는 상반기부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부터 조직적

으로 잘 대응해야 하반기 파업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노조 대표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작업장별로 조직력이나 투쟁 경험의 불균등이 있으므로 투쟁 경험이 있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선구적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간질에 맞서야

'정상화 계획'은 민영화, 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축소, 재벌 특혜 등을 낳을 것이므로 단지 공공기관 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과 전체 진보진영이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철밥통의 이기주의'인 양 취급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하는 지배자들의 이간질에도 잘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방어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공공부문 공격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기 위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7년 IMF 경제위기 때도, 공공부문에서부터 퇴직금누진제 등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복리후생 제도들이 무너지자 민간기업에서도 이 추세가 확대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약을 앞두고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 계획을 저지할 핵심 동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므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요구와 불만을 잘 방어하며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로 인한 신분 불안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막기 위해 적극 파업에 나선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게 이익이 됐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터부시하지 말고, 이 요구를 공공서비스 방어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최미진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지난해 말,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도입 시기 유보 등 속도를 조절하는 시늉을 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본심을 완전히 거둬들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선우 교수의 정책 연구가 교육부 용역으로 진행된 점을 볼 때 정부가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밑그림은 대부분 드러났다

고 볼 수 있다.

이 교수의 발표를 보면, 시간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시간제 교사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2~3일만 고용되고, 승진·보수·연급·연가 등은 고용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다.

거짓말

정부는 시간제 교사들의 임금 수준이 열악할 것임을 아는지라 겸직(학원강사·과외교습자·다단계 판매원 제외)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투잡’ 인생을 강요하는 ‘저질’ 일자리의 본질은 그대로다. 독일에서는 시간제 교사가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정년 보장 약속도 믿기 어렵다. 영어 회화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계약서에는 정년 보장이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해 8월 영어회화전문강사 6백여 명이 대량으로 해고됐고 올해 2월에도 2천여 명이 해고될 위협에 처해 있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박근혜

아닌가.

임용 후 전일제 교사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실현될지 불확실하다. 전일제 교원 수요가 없는 경우는 전환될 수가 없고, 일부 소수 교과목 교사들에게는 시작부터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에 응하라고 하겠다.

또, 전일제 교사가 육아·간병·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제로 전환하면 꼬박 3년을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데, 전일제 교사 수요가 없으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의 비애를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 제도로 달래겠다는 역지의 “끝판왕”이다.

교사들에게 교직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운하고 ‘질 높은 학생 교육 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하라니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교사의 “경력 단절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개별 여성들에게 육아의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공공 보육 시설 확충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시간제 일자리나 때우는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술책이기도 하다.

시간제 일자리의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는 네덜란드·독일·영국 등에서도 앞서 언급한 저임금과 경력 전망의 불리함, 고용 불안, 교육의 질 저하, 여성에게 이중의 굴레 씌우기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바 있다.

본질

정부 측의 온갖 미사여구와 달리 시간제 교사 제도의 본질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저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장난치기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이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껀어 맞추기”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겠는가.

둘째, 고용 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다. 저임금 시간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전일제 교사들의 근무 조건에도 영향을 미쳐 전일제 교사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 유연화가 성공하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시간제가 공무원·교사 등 공공 부문에 집중되는 것에서 보듯 시간제 교사 제도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의 일부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정규직과 각종 비정규직으로 분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박근혜의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에 문을 열어 주지 말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정부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전체 교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될 것이다.



저질 일자리를 전전하라는 박근혜 정부 ‘시간선택제 박람회’ 앞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양윤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비율을 2017년까지 9퍼센트로 높여 지방직 2천4백28명, 국가직 1천6백80명 등 총 4천1백8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명의 전일제 일자리를 0.5명 채용된 것으로 계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고용 효과

가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반듯한’ 전일제 일자리를 2천54개를 저임금의 불량 일자리 4천1백8개로 바꾸는 험잡일 뿐이다.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말과는 달리 ‘투잡, 쓰리잡’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일제로의 전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을 보장하거나 고용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가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봐야 한다.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실제 전환은 쉽

지 않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일제 전환이 아예 막혀 있다. 멸절한 전일제 일자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전면 거부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며 사실상 용인하지는 주장은 당면 투쟁에 효과적이지 않다.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화를 반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한 유연근무제가 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본인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시간제로 근무하다 나중에 다시 전일제 근무로 돌아오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대폭 감소되는 생활 수준 문제,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에서 눈치밥이나 먹는 신세가 되는 문제, 대체인력인 시간제 직원에게 중요 업무를 맡길

수 없어 다른 동료들의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사회 복지가 열악한 이 나라에서 소득 감소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의 자발성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례로 드는 네덜란드나 독일, 영국은 한국보다 복지 제도가 훨씬 잘 구축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에서조차 주로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떠밀리는 것은 불충분한 보육시설 때문이다. 보육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스웨덴에서는 기혼 여성들도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도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 운운하는 것

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짐을 지라는 말과 같다.

지난해에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하고 1명이 과로로 죽은 것에서 보듯이 시급한 것은 OECD 국가 평균에 견줘 현판없이 적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에 더해 노동조건 악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보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공공부문의 시간제 도입 저지 투쟁과 시간제 교사 제도 폐지 투쟁, 보건의료 부문의 시간제 저지 투쟁 등에 함께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노동자를 적으로 대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이정원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더니, 심지어 위자료 10억 원과 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청구하려 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4인의 지도부가 끝내 구속 기소됐고, 경찰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1백90여 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리고 노동자 5백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수백 명을 파면, 해고하는 등 중징계 하려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민영화뿐 아니라 공항철도 매각, 적자선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화물 분리 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KTX 민영화는 바로 이런 민영화의 출발점이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은 중단돼야 한다.

또, 철도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로 민영화 반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대상이다. 필수유지제도로 파업권을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며 탄압하는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가 광범했던 만큼, 탄압에 반대하는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2월 4일 서울지방본부 산하 지부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에 반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지역대책위들이 철도공사 지방본부 3곳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끝나지 않은 투쟁 2월 4일 철도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부당 징계 반대 집회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철도공사가 1월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지침에 따라 ‘철도공사 경영부채 및 감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공항철도·민자역사 등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7개 역 무인화, 34개 역 아웃소싱, 적자선 운행 감축, 열차 요금 인상 등 철도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이 방안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철도공사의 부채 14조 7천억 원의 4분의 1가량이 용산개발사업 파산, 공항철도 인수로 인해 생긴 것

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익서비스제공의무(PSO) 보상비 수천억 원도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철도 건설 부채를 철도공사에 떠넘겼다.

영업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적자는 운송료를 원가의 60퍼센트로 낮게 책정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수출물류기업, 정유사, 시멘트 회사 등 사실상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반면 철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30개 공기업 중 최하 수준이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퇴직금, 복리 후생 제도를 다룬 단협을 대폭 개악하고 인력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전환배치도 추진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해 향후 분할 민영화를 위한 길을 닦고, 차량과 승무 분야의 사업

소 통합화,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이런 시도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천전기지부는 일방적 근무체계 개편을 저지했고 오송전기지부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기관사와 차량정비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철도노조는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와 노조 탄압 중단을 위해 2월 25일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에 맞춰 24시간 경고 파업을하기로 확대쟁대위를 열어 결정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된 만큼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계속 이어가 수서발 KTX 문제 등 끝나지 않은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철도공사가 2월 5일부터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사측은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선은 상행과 하행이 함께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안전 시스템도 미흡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열차 차장도 없는 화물열차를 기관사 혼자 책임지는 일은 매우 위험한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시범 운행 첫날부터 제천과 청량리 기관사 지부에서 즉각적인 저지 투쟁이 시작됐다.

시범 운행 첫날 아침 제천역에서는 제천 기관사지부 노동자 50여 명의 격렬한 항의에도 사측 관리자 1백여 명이 총동원돼 노동자들을 가로막았고, 제천 승무사업소 소장이 직접 기관사실에 타 시범운행을 강행했다. 이 열차가 도착하는 청량리역의 기관사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내려 보내는 열차의 시범운행을 저지하려고 열차의 기관사석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통쾌하게 시범운행을 막았다. 사측 관리자의 답성을 막고 청량리 조합원이 탑승해 2인 승무로 열차가 출발하자, 노동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첫날 ‘준비 부족’으로 사측한테 당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제천 기관사들은 다음날 두 배로 모였다. 제천차량지부 노동자들과 제천대책위도 합세해 1백 명이 대열을 이루고는 기세 좋게 사측 관리자들을 밀어내고 시범운행을 저지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청량리 기관사 지부도 시범 운행 저지에 나섰고, 시범운행을 기필코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은 중간 정차 역에서 부기관사를 협박해 열차에서 내리게 하는 등 비열한 꼼수를 부려 시범운행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사측의 시범운행은 노동자들의 항의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대책위들이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막는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기습적인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 노조의 지적처럼 ‘공사가 기습적으로 시작한 화물열차 단독 승무와 여객열차 1인 승무, 화물차량 정비주기 연장은 화물 물류자회사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인데, 이를 위해 기관사들을 제압하는 것이 사측으로서의 매우 중요하다.

또, 지금 사측은 철도노조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사 부문을 집중 공격해 전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사측은 파업 때 투입한 대체인력을 서울KTX기관사로 발령을 내는 도발을 감행했고, 앞으로 KTX 기장을 비조합원 팀장으로 채워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게다가 조만간 시행될 기관사 사업소 통합화, 강제 전환배치 등 기관사들에 대한 만만치 않은 구조조정도 예고된다. 따라서 기관사 1인 승무 저지는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와 인력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기관사들의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승리는 철도 노동자들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냈다. 지금 광범하게 벌어지는 사측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도 이번 투쟁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김은영·이정원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강제 전환배치를 시행하면 25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앞당겨 벌일 계획이다. 철도공사가 ‘조직 분위기 쇄신’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인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환배치 강제 추진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사측은 조만간 대규모 전환배치를 하고,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특히 ‘직렬 간 인력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다른 직종으로 무차별 전보를 하려 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무연고지 전보 금지도 깨려 한다.

철도공사가 말하는 ‘조직 분위기 쇄신’은 인사권을 휘둘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관리자에 의해 평가받는 근무평정, 근무 성적 등의 기준을 적용

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호남지방본부 한 활동가의 지적처럼 “노조가 막아 온 사측의 일방적 전보 금지가 풀리면 조합원들은 더는 노조에 기댈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전환배치는 사측에 미운 털이 박힌 활동가들을 숙아내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이 전환배치는 철도 전반의 인력 감축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신규 인력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야금야금 외주화를 추진하거나 기존 인력을 쥐어짜왔다. 그러나 기관사나 차량 직종처럼 노조 내에서도 조직력이 강력한 곳에서는 이를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공사는 이번 전환배치를 통해 철도 전 직종에서 강력한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다.

또, 내년에 추진될 수서발 KTX 자회사로 ‘철도 공사 직원 이직’이나 화물·여객·차량·시설유지보수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철도공사가 이런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직종 간 노동조건 차이를 이용해 노동자들 내 분열을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좀더 나은 조건이 보장되는 곳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전보를 일부 수용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 통제 강화와 노조 무력화,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궁극적으로 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에 단결해 맞서야 한다.



2월 5일 청량리역에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막아낸 노동자와 지역대책위 활동가들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 글은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연대의 밤 -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행사에서 하현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이 행사는 철도 노동자 80명을 포함해 학생, 노동자, 청년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앞으로의 투쟁과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연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큰 박수) 동지들, 반갑습니다. 동지들이 철도 파업 23일 동안, 또 그 전부터 이 후까지 보여 주고 있는 뜨거운 연대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저희는 현장의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파업 투쟁이 잠시 중단됐지만 철도 민영화 저지 싸움이 올 한 해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대단히 긴박하게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철도공사 이사회 날짜가 확인된 후 11월 26일 [철도노조] 확대집회에서 6시간 정도 지부장들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 때 저도 열차를 전면적으로 세워서, 함께 파업 투쟁을 승리하자고 호소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은 위원장한테 [파업 전술이] 위임됐고, 결국 필공파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한 후] 첫째는 2009년 때보다 [파업을] 더 오래 지속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축제적으로 맞지 못하도록 파탄내는 것, 그러기 위해 12월 19일을 반드시 넘겨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을 넘겨서 더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가면 연말까지도 파업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이 조합원들과 제 개인적인 약속이었고, 지부의 방침이었죠.

12월 10일 이사회 통과 이후 국토부와 공사는 파업 3일차부터 대규모 직위해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위축되기보다 '야 이거 너무 부당하다', 또 필수 조합원들은 '동료들이 직위해제가 됐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더 하게 되면서, 직위해제가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국민들 여론이 그때부터 공사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열렬하게 폭발하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놀랐어요. 파업 3일차 넘어가면 '국민의 발을 불모로 한, 이기적인 철밥통'이라는 비난들이 항상 쏟아졌기 때문에, 파업 중에 조합원들이 대신선 선전전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경과하면서 대학생들의 '안녕들하



김미경 기자

십니까' 대자보가 등장하고, 열렬한 지지 속에서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선전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는 상황이 된 거죠. 파업 대오가 오히려 강고해지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파업에 돌입하지 못했던 지부들이 속속 파업 대오로 재조직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4일 집회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14일 집회 때 정말 많은 대오들이 상경 투쟁을 했어요. 저도 그 날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이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길게 가면 사실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들이 지도부를 침탈해[는 등의] 경우에는 전면파업으로 나가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14일 이후 조합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밤 촛불 집회까지 결합하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 줬습니다.

사회·정치적 주도성

16일쯤에는 이데올로기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모두 나와 '민영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 전에는 민영화라는 단어 대신 '경쟁체제 도입'과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제 민영화 논란 안에 들어왔어요.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에 국민들은 어쨌든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노조에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이었어요. 그건 박근혜 정부의 패착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심장을 공격하자, 민주노총 지도부



1월 21일 성공적으로 열린 '연대의 밤 -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가 연대파업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는] 반전이 있어서 조합원들도 굉장히 통쾌해 했어요.

그런데 27일 야밤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어요. 그날 밤 본부장, 사장, 상임이사, 처장들, 소장들, 전부 다 조합원들에게 [복귀하라는] 문자를 밤 12시 넘어서까지 보내고 엄청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측에서] 문자가 한 번 오면, 지부에서도 문자 한 번 보내고... 이걸 반복했어요. 그 다음날인 28일 3차 상경투쟁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총회 때 조합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총회 장소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거 같았어요.

한편, 파업 기간 동안 [노조 내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지부장들은 지부 조합원들 조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은 현장 간부들이 이 파업을 승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더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통은 노조 골간 체계에서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특성상 파업에 돌입하면 거의 위원장이 전권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논의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 선언이 됐습니다.

어쨌든 30일 복귀를 하게 되고, 더 싸울 수 있는 지부들의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8일 정도 되면 위원장이 연말연초에 대한 투쟁 전망들을 제시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조합원들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이 흔들리고, 일부 복귀를 했습니다.

악평하자면, 23일 동안 최장기 파업은 철도 노동자들도 스스로 놀란 파업입니다. 또, 국민들의 이토록 열렬한 지지를 처음 느꼈던 파업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줬고요. 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보면서 통쾌함, 가능성, 희망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집권 1년차 가장 힘든 대통령에 맞서서 철도 노동자들이 싸워 줌으로써 다시 반박근혜 전선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준 것들에 대한 의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에는 시민들이 광우병 촛불을 들고 그 수혜로 우리가 철도 민영화를 막았습니다. 그때는 [촛불이] 노동자 운동을 이끌어 간 형국이었다면, 이번 파업은 반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싸워서 여러 단위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촛불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철도노조 같은 조

직화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이 즉각적인 사회·정치적 파장을 만든 것이죠. 노동자 계급 투쟁의 사회·정치적 주도성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은 중단됐지만 [노동자들의] 기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가진 앓을 것입니다. 1월 말부터 지부 간부들을 시작으로 2월에는 파업 참여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은 징계에서 감봉 정도는 다 이미 마음먹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쫓길 앓을 거 같아요.

그러나 계속 당하기만 하거나, 철도 민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후에 물류회사·차량회사 등의 공격을 방관한다면, 조합원들이 위축되고 투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쟁 계획을 다시 세워 이 문제들에 대응하고 재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2월 25일 민주노총이 국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적어도 철도노조가 하루 파업이든 어떤 파업이든 정말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제전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측이] 그걸 통해서 철도노조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조합원들이 '야 노조 활동 하면 이런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인식을 뼈저리게 심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본부장 체계로 지역본부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대표본부장이 [강제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 국토 소위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을 조합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해서 어떤 근거나 실마리로 삼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수서발 KTX 문제를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2라운드 투쟁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차량지부는 화물 열차가 출발할 때 하는 정비 업무 분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차량지부는 이 분리 추진을 위한 사측의 '출발검수 교육'을 무산시키고, 해당 역지부들에 요청해 수송원 노동자들의 교육 거부도 조직했다. 역지부들이 이에 호응해 노동자들이 교육에 불참해 했다. 이 때문에 사측은 2월 7일 예정된 합동근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화물열차 출발 검수 업무를 야금야금 떼어 내어 수송원들의 업무로 넘겨 왔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서울차량지부 한 노동자는 “화물열

차의 출발 검수는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비 업무로, 꽤 까다로운 정비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송원에게 넘기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이들의 노동 강도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실제 부산에서 출발 검수와 수송업무가 통합된 후 이 일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산재 사고가 잇따랐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차량 정비분야의 인력을 줄이려고 이 위험한 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하현아 지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철도공사 물류본부가 이것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차량 정

비 분야 인력감축뿐 아니라 올해 추진 예정인 화물 자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서울차량지부는 사측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인력 87명을 감축하려고 일반 여객 열차, 수도권 전동차의 정비 주기를 대폭 연장하고, 화물열차 3개월 주기 정비를 아예 없앨 방침도 내놔다. 이는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이정원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대한민국은 지금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수언론이나 SNS 상에는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갖고 오는 양 떠벌립니다.

사실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란 표현이 보다 논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이 담당하는 것이 '옳으나' 하는 측면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이윤 창출이고, 흔히 수익 극대화, 비용 최소화를 통해 달성됩니다. 그렇게 쌓인 이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보다는 사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경제원론 수준에서도 규모의 장치산업이나 네트워크(=망) 산업은 독점적 폐해를 낳습니다. 부당한 초과이윤을 달성한다는 점이고, 이는 곧 경쟁의 부재에 따른 가격결정권을 독점기업이 갖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통상 자연독점을 낳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SOC사업

은 민간이 맡기보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영으로 맡게 됩니다.

지난 연말 논란의 중심이었던 수서발 KTX의 경우 이 사업은 그 자체로 노다지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코레일이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노선으로 이미 검증된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조 원의 국민혈세로 만들어 놓고 운영권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가 갖는다? 이게 바로 사유화입니다.

자연적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망산업을 왜 업무별, 노선별로 쪼갤까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율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놈, 버릴 놈 나누어 자본의 돈잔치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윤, 효율, 경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을 넘보는 사적 자본의 탐욕은 제어할 수 없는 기제로 공동체의 삶을 황폐화시킬 따름입니다. 그 자본의 성격이 다국적 외국자본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권력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사유화 과정은 국가의 역할인 자본통제, 시장규율, 복지, 공공성에 대한 자본권력의 침탈과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민영화를 끝장내지 않으면 민영화가 우리를 끝장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박문영 철도노조 수원전지부장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4일간 첫 전국 규모 파업을 벌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1월 13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작된 파업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며 자신감을 쌓은 노동자들은 2월 5일부터 나흘간 최초의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파열구를 내며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들이 삼성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것이다.

그간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고 노조원들에게 온갖 폭언을 퍼붓고, 표적 감사를 자행하고, 일감까지 빼앗았다. 이런 악랄한 탄압이 최종범 열사의 죽음을 불렀다. 그러나 최종범 열사의 죽음은 삼성의 노조 탄압과 삼성전자서비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악물고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 열사의 뜻”이라며 “삼성을 무릎 꿇릴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노동자들이 삼성의 극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은 커져이 쌓여 있는 분노 때문이다. 이정구 분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삼성은 우리를 공짜로 부려 먹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분당임금’이라며 일률적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병장고를 고쳐도 들이는 시간이 다른데 무조건 분당 기준을 정해서 그 돈만 주는 거예요. 게다가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온갖 비용을 다 우리 임금에서 빼요.

“18년 동안 점심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20분만 주고는 밥값 1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성수기에는 주 80~1백 시간까지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급여에 연장수당도 다 녹아 있다며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았어요.”

한 조합원은 사측의 노동 통제가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게 해요. 정말 모멸적이었어요. 사실, 우리 잘못도 아니고 특정 고객의 불만을 무조건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였거든요. 단지 A/S를 한다는 이유로 ‘미안합니다’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형편없는 임금에 대한 불만도 크다. 홍성도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가 갈수록 오히려 임금이 줄었어요. 비수기는 건디기 힘들어요. 건당 수수료 다 받으면 1백만 원인데 거기에 기름값 떼고, 뭐 떼고 하면 30~40만 원밖에 못



삼성과의 본격적 대결을 시작한 노동자들 2월 5일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권역 파업 결의대회.

받아요. 우리는 휴일수당도 못 받았어요. 폐인 임금도 많고요. 휴일에도 나와서 대기하다가 한 건도 수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종이였어요”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성수기에는 죽도록 일하고 비수기에는 배를 곏아야 하는 건당 수수료 체계가 아니라,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생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 단협을 체결하라는 것은 법으로도 보장돼 있는 기본적인 요구다.

실질적 사용자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으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발뺌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채용, 노동조건, 교육,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관리한다. 명백한

위장도급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동안 ‘세계 최고의 A/S’를 자랑하며 이윤을 쌓아 온 것도 삼성전자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다.

그동안 삼성은 막대한 부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정·재계, 언론, 법조계 등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삼성의 ‘신화’는 이견회의 ‘뛰어난 리더십’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유착한 부패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탄압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대학들을 줄 세우기 하려던 삼성의 시도가 사회적 비난을 받아 좌절되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를 다른 영화가 개봉된 것처럼 삼성의 ‘초일류’ 만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매우 크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삼성의 본질을 폭로하고 삼성에 맞선 투쟁을 자극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전체 노동운동에 전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김선영 분회장도 이 점을 힘줘 말했다. “삼성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우리를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우리가 더는 시키는 대로 하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성의 심장과 머리를 물어뜯을 겁니다.”

삼성이 그토록 집요하게 노조 설립을 탄압하는 것도 삼성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바로 삼성의 이윤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노동자들이 최초로 대규모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에 나서면서, 노동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의식도 성장하고 있다.

의식의 성장

“울산은 1월 18일 첫 파업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조합원들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고, 이제 뭔가가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변화를 느낍니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고, 잔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과 기름값도 개인이 부담했는데 3월부터는 차량과 유류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해 보니 또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조로 인해 힘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조병훈 대의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명절에 쉬어 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안 하게 된 것도 노동조합 만들고부터고요. 주5일제가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홍성도 조합원)

“저는 제 직장을 걸고 싸울 거예요. 고용 유지가 생명과 같은데 저는 그걸 걸고라도 싸울 거예요.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노조를 인정 안 해 온 회사니까요. 고통스럽고 긴 싸움이어도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삶만 아니라 삼성도 바꿀 겁니다.

“노조를 만들고 센터 관리자의 언행, 업무 지시 태도 등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폭언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관리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요. 점심시간도 없어서 알아서 시간을 쪼개서 먹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생겼어요. 조합원들이 말하니까 비조합원들에게도 점심시간을 줬어요.

“그동안 부당해도 숨죽였지만 이제는 부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안형준 조합원)

조명지

경인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경인지역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센터 앞에서 ‘출근투쟁’(일종의 아침의 홍보전)을 한다.

“맨 처음 출근투쟁 할 때는 정말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어색합니다. 파업 기간에도 ‘출근투쟁’을 할 것인지 토론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센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팻말과 배너를 쏙 펴고 당당하게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를 찾는 고객과 지나는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전도 매일 진행되고 있다. 부천센터의 한 노동자는 “센터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집회도 규모 있게 하니깐, 그동안 억눌린 것이 풀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파업 이틀날 새벽, 익명으로 ‘저는 파업에 빠지겠습니다’ 하는 문자가 노동자들의 휴대폰을 울렸다. 혹시나 해서 잠을

설치고 심란한 마음으로 파업 집결지로 모였는데,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 대열에 함께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꿈을 부린 것 같다”며 전보다 더 끈끈한 동지애를 확인했다.

물론 파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고민과 어려움도 많아졌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가뜰이나 적은 임금에 파업 동안 벌이도 없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은 더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안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안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처음에는 안사람이 노조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정말 한치의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설득했고, 결국 안사람도 동의해 줬습니다.”

“노동조합의 ‘노’자도 들어 보지 못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파업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굶어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밥을 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저들의 노림수 같아요. 저도 빚쟁이지만, 지금 그만두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두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졌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장갑을 끼는데, 장갑 안으로 손가락 5개를 펴고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게 훨씬 따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뭉쳐서 싸웁시다.”

“이미 삼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인 만큼 완

전히 정당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물어놓은 최종범 열사의 유언은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자본에 맞선 지금의 투쟁이 최종범 열사가 주고 싶었던 도움 아닐까 합니다. 연대와 관심을 놓지 않아 주신다면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해내 보이겠습니다. 삼성을 바꿔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인천지회 회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부터 파업 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알리고 지지·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인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회에서 연대를 조직하고 있다. 전교조 부천초등지회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단체 관람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투쟁 기금을 모은다고 한다.

청소년 회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반나절 만에 청소년 수십 명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 왔다.

“무노조 삼성 공화국을 바꾸는 큰 힘이 되어 주세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분들! 힘내세요. 삼성의 숨겨진 모습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소은하·박한솔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주인공 모델 이종란 노무사 인터뷰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삼성을 바꿔야 합니다”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 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삼성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실화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했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로 화제가 됐고, ‘개봉 전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물론 높은 관심을 거슬러, 상영권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 관람이 돌연 취소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CJ, 롯데, 중앙일보 등이 소유하는 대형 극장들이 삼성을 공공연히 비판한 영화를 상영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봉 첫날부터 높은 관객수를 기록했고, 곳곳에서 영화보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파업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도 파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단체 영화 관람을 하고, 영화를 널리 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극중 ‘진성’ 그룹에 맞서 싸우는 노무사 난주의 모델이 됐던 이종란 노무사(가운데 사진)를 만났다. 이종란 노무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여름 유미 씨 아버님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에 아버님은 팔을 잃은 지 얼마 안 되던 때여서 굉장히 슬픈 표정이었는데,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내 딸이 2인 1조로 일하는 곳에서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을 했는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같이 일했던 이숙영 씨도 백혈병에 걸렸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개인 질병이라고 우깁니다. 삼성에 노조라도 있었으면 내 딸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라고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쳐 대책위를 만들었죠. 이렇게 ‘반올림’이 2007년 11월에 결성됩니다.

당시 아버님의 말에 따르면 삼성반도체에 다니다가 백혈병을 얻은 사람이 6명쯤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우리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한 공장에서 6명이나 백혈병 피해자가 있는데 왜 산재가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후 거짓말처럼 제보가 들어왔어요. 정말 소름끼쳤죠. 처음에 6명이라고 했는데, 13명, 18명... 그러다가 우리에게 제보해 준 최초의 피해자분 박지연 씨가 유미 씨처럼 똑같이 23살의 나이로 2010년 3월 3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투병 과정을 다 봐 왔는데, 우리로선 굉장히 충격이었고, 박지연 씨의 사망이 언론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도 급격하게 늘었어요.

현재까지 백혈병이나 뇌종양, 각종 암, 유사 희귀 질환에 걸린 사람이 삼성전자에서만 1백38명, 사망자는 56명이예요. 삼성의 계열사까지 합치면 1백80여 명, 사망자는 70여 명입니다.

당시 정부도 백혈병 발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매우 형식적이었고, 아버님 말로는 유미 씨가 근무했던 것과

[환경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미 4~5년이 지난 후였으니까요. 당연히 [산재] ‘불승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불승인’이 나온 6명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1월이예요.

우리 나라에서 백혈병, 암을 산재로 인정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사고성 재해에 비해 암과 같은 질병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알아 내기가 힘들죠. 이걸 아픈 노동자나 유족에게 입증하라고 해요.

0.1퍼센트

삼성이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모든 걸 입증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0.1퍼센트 미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움을 해야죠.

소송에 이길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증인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희귀 질환에 걸린 분이었던 거예요. 용기 있게 작업 환경이 어땠는지 잘 얘기해 줬어요. 또, 과거에 삼성이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한 ‘환경 수첩’에 여러 암 유발 물질이 기재돼 있었는데, 이런 증거들도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2011년 6월 23일 황유미 씨를 포함한 2명이 산재 인정을 받습니다.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 인정이라는 이정표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공단과 삼성이 곧바로 항소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이 안 끝났어요. 법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보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영화는 1심에서 끝이 납니다. 영화 말



노무사 이종란

미에 실제 인물 고(故) 황유미 씨 추모 기자회견 때의 유미 씨 아버님 사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제작두레’를 한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 자체가 엄청난 감동을 주죠.

영화촬영 끝나고 속초에서 풍파티를 한다고 해 제가 황유미 씨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갔거든요. 그 때 처음으로 [영화 속

고(故) 황유미 씨를 연기한 박희정 배우가 삭발한 모습을 봤는데, 박희정 씨가 모자를 잠깐 벗었을 때 모두 다 평평 울었어요.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후원으로 제작비가 마련됐고, 이 영화를 꼭 만들겠다는 영화 노동자들의 일념으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동이죠.

그런데도 영화가 공정하게 상영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요. 문화예술마저도 거대 자본이 통제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극소수의 피해자와 사람들만이 삼성 문제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임들이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반올림’이고, 삼성전자서비스노조도 대중적으로 건설됐고, 삼성노동인권지킴이도 생겼죠. 민주노총 중심으로 삼성 대책기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튼튼하게 자리잡는 것, 그런 속에서 광범한 대중 운동을 만들면 삼성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긴다면 삼성의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안겨 줄 거예요.

‘반올림’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 판정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삼성에게 직업병 피해에 대해 제대로 사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정취해 낼 것입니다.

오는 3월 6일은 고(故) 황유미 씨 7주기 추모 기일입니다. 이번 기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미 씨를 비롯해 직업병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삼성을 바꿔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낼 것입니다.

영화가 흥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삼성의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될 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자 민주노조를 건설해 싸우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성지현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글은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월 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아래 사진)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마다 거의 10퍼센트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1>은 OECD 통계인데 2009~11년의 의료비 지출 추세가 그 전과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확 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네요.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보건 지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당노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생길 정도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2009~11년에도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마다 10퍼센트씩 더 아파졌느냐? 정부는 노인들이 해마다 많이 증가해서라는데, 노인들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의료비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던 큰 이유는 병원 수 증가입니다. 한국은 인구당 병상 수가 2000년만 해도 OECD 평균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8.3이예요. OECD 평균이 4.9인데요.

의료비가 굉장히 치솟은 다른 이유는 불필요한 진료, 과잉 진료, 돈이 많이 드는 진료를 엄청 했었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OECD 평균의 10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국의 병원들이 갑상선암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에는 ‘갑상선은 증상이 없으면 초음파도 하지 말고 뭔가 발견돼도 1센티미터 미만이면 검사도 하지 말아라’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들은 돈이 되니까 초음파를 해요. 그리고 초음파를 해서 뭔가 나오면 다 썰어서 검사를 하죠. 의사가 ‘갑상선암이 있는데 1센티미터 미만이라 지켜봐도 괜찮아요’ 하고 말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결국 갑상선암을 수술하겠죠.

그런데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건강 보험 적용을 받으 수술을 하시면 목에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로봇으로 하시면 흉터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갑자기 로봇 수술의 메카가 된 겁니다. 아시아 전체에 로봇 기계가 31대 있었을 때 한국에는 28대 있었습니

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병원들이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 병원이었다’ 하고 말하면, ‘예, 한국 병원들이 무슨 비영리야 하는 반응이 많은 거죠.

<그래프2>는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의 사를 방문하는 횟수예요. 또 맨 위나 아래에서 찾아야겠죠? 한국 환자들은 1년에 13번 방문해요. 영국 같은 나라들의 환자들은 1년에 5번 가네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연간 방문 횟수가 10~12를 넘는 곳을 문제 지역으로 보고, ‘아, 여기는 뭔가 병이 도는 것 아니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며 조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은 나라 자체가 그 병원을 넘어설 정도로 많죠.

우리 나라는 일본과 함께 행위별수가제, 즉 병원에 많이 방문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내는 제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이염 같은 질병에 항생제를 1~2주 쓰고 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매일 방



사진:대중

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죠. 병원들은 적자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KB투자금융이 만든 자료를 보면, 회계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면 실제로는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미국 영리 병원들의 평균 수익률이 4.1퍼센트예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평균은 9.1퍼센트예요. 한국 병원들은 제조업의 2.5배가량 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

다. 이러다 보니 자본이 그렇게 영리병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11~13년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병원 이용이 줄기 시작했고, 건강보험이 드어 지난 2년 동안 휴자를 11조 원이 나 됐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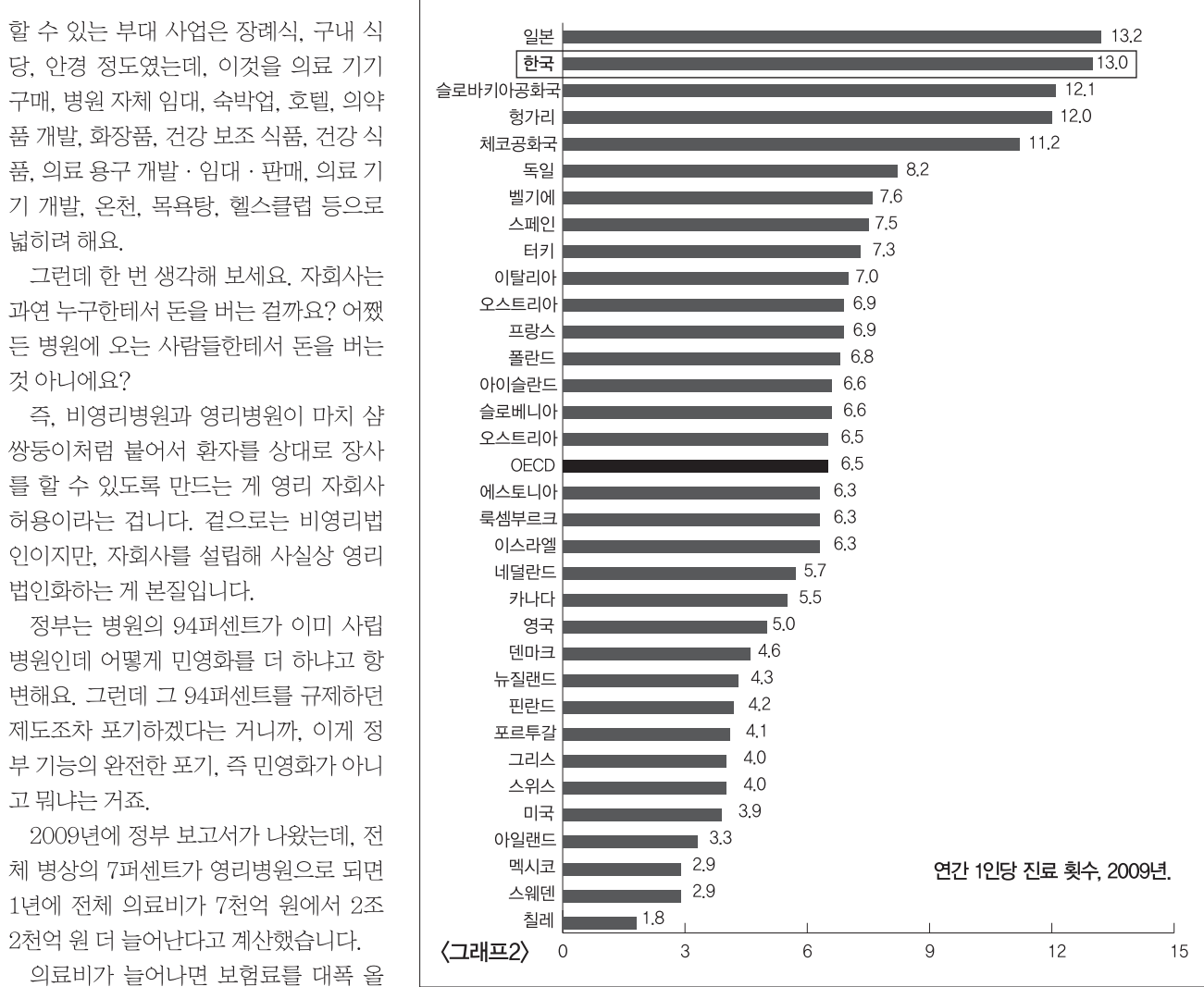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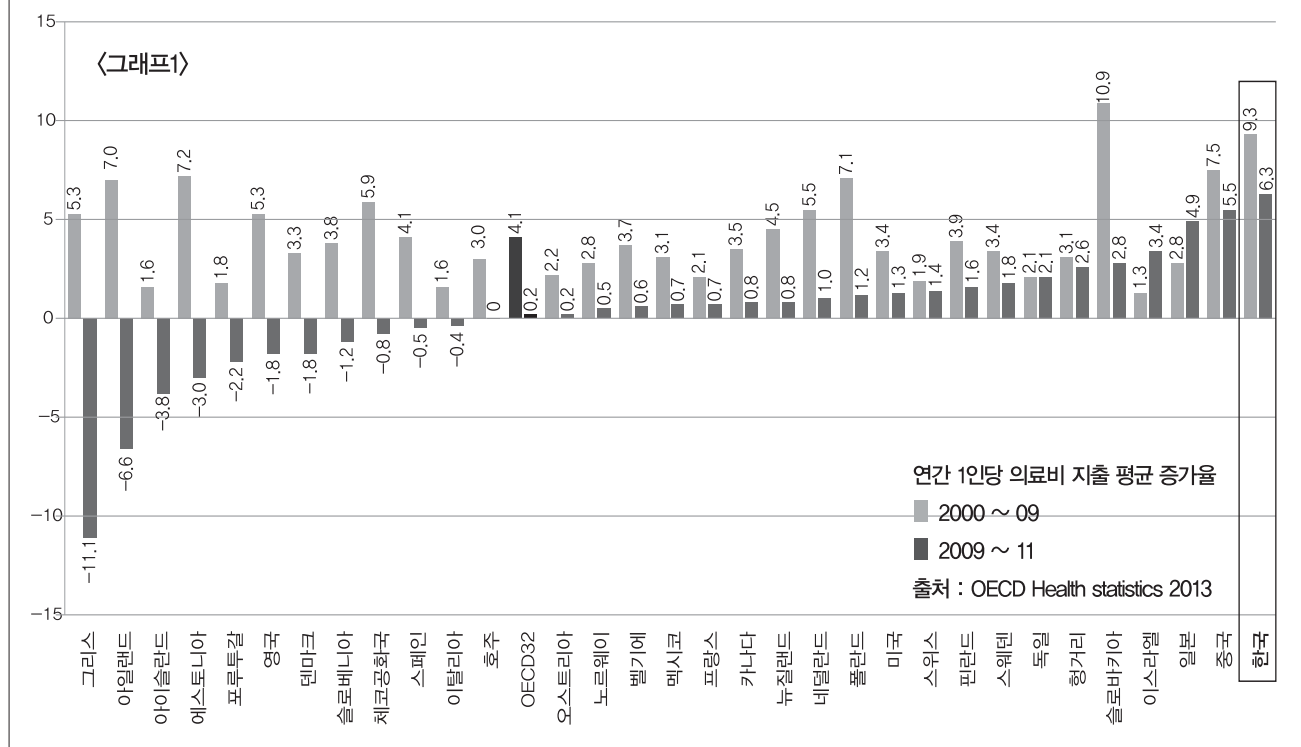
이러면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어렵습니까?’ 하고 묻는 게 제정신 바킨 정권이겠죠.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어, 병원들 살림살이는 어때세요?’ 하고 묻더니 ‘병원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졌다. 중소 병원을 살려야 한다. 국민들도 합심해 중소 병원을 살립시다’ 이러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병원이 어떻게 돈을 벌죠? 하나는 환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을 줄이는 거죠. 병원 지출에서 인건비가 50퍼센트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게 병원으로서의 굉장히 큰 일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 나라 병원들은 돈벌이에 굉장히 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비영리법인 제도예요. 비영리법인이 뭐냐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원에 서 번 돈을 병원 안에서만 쓰게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해도 70퍼센트 이상이 반대하고 2008년 촛불 때 의료 민영화 반대 구호가 터져 나오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자회사 영리기업 같은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는 3종 세타가 있어요. 첫째, 민영화를 하면서 절대로 민영화 아니라고 한다. 둘째, 자회사를 설립해 민영화한다. 셋째, 법을 개정하지 않고 민영화한다. 철도랑 의료랑 이 세 가지 점이 똑같아요.

자회사가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 지금까지 병원



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2년 사이에 30퍼센트 이상의 인력이 해고돼요. 특히 고강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고하죠. 특히 간호 인력, 임상 기술직, 임상 기사, 병리사, 방사선사, 의사들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당하겠죠.

그래서 결국 병원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설립률이 격정하더라도 병원 자회사 설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비 폭등으로 돌아오고, 다른 한편으로 병원 노동자 해고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하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겠죠. 국회로 가든 안가든 맨 마지막에 막는 건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됐는데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민영화·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와 교육을 제외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가, 2012년에 다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특히 의료서비스 부문을 보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는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도입, 비전문 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 규제 완화, 의료기관 체권 발행, 해외 환자 유치 유인·알선 허용 같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이 총망라돼 있는데 의료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인 거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드는 이유가 의료를 서비스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각종 규제를 풀고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사진:대중

다음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 개발, 재정 지원, 인력 양성

과 수요·공급 조절, 조직·인력 운영, 추진 상황 점검, 법령 제정·개정 등 서비스산업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는 구 조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만들어 보고해야 하며,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심의 의결과 개선 의견을 통보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를 위탁·과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복지 업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사라지고 경제부처의 시장논리·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한 겁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지난 1월 28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이 출범했다.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1백 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민영화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이 투쟁에 헌신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의료노조에는 소속되지 않은 병원 노동조합들이 소속된 의료연대본부(서울대병원 등)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세브란스병원 등)도 참가했고, 사회보험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공단)도 참가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 광범한 단결의 기회를 만든 것은 무척 좋은 일이다. 이 기회가 실질적인 연대 투쟁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NGO들과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를 좌파 단체도 참가했다. 참가 단체들은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광범한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을 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대 여론에 밀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012년 7월 20일 정부가 내용을 약간 수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국회에 발의해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2월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과 궤를 같이 합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과 법인약국* 허용, 외국인 대상의 의료 광고 허용 등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돼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 개발, 재정 지원, 조직·인력 가동, 추진 상황 점검, 법령 제정·개정 등을 엄청난 속도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모두 풀어 줘야 한다”며 보건 의료 분야를 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 하는데 이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쌍둥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병원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투자활성화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고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영리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극심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병원 노동자들은 단지 ‘비용’으로 계산돼 인력 감축, 외주용역 확대,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의 고통과 회생을 강요당할 것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벌어질 것이고, 원격의료 허용과 법인약국 허용으로 동네 의원·동네 약국이 망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형병원과 대형약국, 네트워크형 병원·약국*이 등장하고, 재벌자본이 투입돼 수많은 병원과 약국을 장악하는 문어발식 확장 경쟁이 진행됨으로써 의료기관은 더 양극화되고, 의료는 더 왜곡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재앙입니다.

더 건널 수 없는 것은 병원 노동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사라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안내하고, 자회사가 판매하는 각종 의료용품과 건강식품 등을 사라고 권유하고, 부대사업을 이용하라고 강권하는 판촉사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 파괴, 근로조건 파괴, 자긍심 파괴 정책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이 가져올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주 1회 병원 내 환자·보호자 홍보활동, 대국민 홍보활동,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1백만 국민서명운동,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강행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정당 면담과 의료 영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의견 확인을 추진할 것이고,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는 전국에서 약 2천 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의료 민영화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민주노총의 국민파업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더 확대하고, 4월 7일 보건의 날을 계기로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조합원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의료 민영화 저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6월에는 의료 민영화 법안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법인약국

법인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기업 진출이 가능 하다. 지금은 약사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약국

개인이 여러 개 병원·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 의료령 영리 추구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금지돼 있다.



정호중

1월 29일 서울역 앞 귀환 홍보전

사진:대중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악의 구체적 내용이 당장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온갖 복지 공약 먹튀 논란의 화살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인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공격해 복지 공약 먹튀를 몰타기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는 ‘비정상’을 행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공무원연금을 ‘비정상적 특혜’라고 비난하고, 언론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해마다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호들갑을 떠다. 그리고 이 돈이 다른 노동자들의 세금이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이간질

하지만 임금의 일부인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다. 이것이 문제라면 사용자가 일을 시키고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는 것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진정으로 “비정상”인 것은 턱없이 낮은 정부 부담률이다. 공무원이 한 푼도 내지 않는 독일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62.1퍼센트를, 미국조차 35.1퍼센트를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은 고작 9.6퍼센트다.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먹이며 개악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비교적 나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 지난해 <한겨레21>은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이미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1인당 (1억 4천8백49만 원)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천7백47만 원)보다 1.7배 많[다]”고 했다.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더 받는 돈은 월 25만 원 정도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지켰다면 공무원이 더 받는 돈은 고작 월 5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조금 나은 공무원연금인 게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의 폐기와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이다.

한편 공무원들이 빨리 죽지 않는 게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1960년 평균 수명은 58세였는데 지금은 80세여서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수급 기간이 20년 이상 늘어나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의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이 나[아]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다]”면서 비열한 이간질 술책을 부린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이상[으로] 늘어”나 적자가 심각해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책임 회피하기가 진짜 “비정상”이다. 2009년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진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다. 2000년 연금 개악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살에 공무원을 시작했을 경우 40살에 퇴직하면 연금 수급권이 생겼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낮았지만 수급 기간이 지금보다 짧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공무원이 더 오래 산다는 것도 틀렸다. 200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권을 잃은 퇴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67.7세, 국가일반직공무원은 65.3세다. 당시 정년이 57세였던 소방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평균 2년 안에 사망했다!

‘고령화’가 문제라는 주장은 국민연금 개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자들이 퇴직 후 금방 죽지 않아서 국가와 젊은 노동자들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우스운 주장이다. 공적 연금이 적어질수록 그만큼 사적 부양비가 늘고 공적 연금이 많아지면 부양비가 줄어든다. 결국 사회

전체로는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세대가 재정 부담을 질 것인지가 아니라 동시대에 어느 계급, 계층이 부담을 질 것인지가 핵심이다.

돈 내는 현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실업이 큰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정규직 공무원 숫자도 문제인데, 도리어 공무원연금 적용도 안 되는 질 낮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도입하고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노동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될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는 것보다 부자·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이 돈으로 더 나은 기초·국민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에게 더 이롭다.

연가투쟁

박근혜 정부가 연금 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불안과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나빠진 교육 환경과 연금 개악 때문에 명예 퇴직 신청이 지난해보다 15퍼센트 늘어 “명퇴 재수”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현장 순회 중에 만난 퇴직을 몇 년 안 남긴 한 조합원은 “연금을 개악한다는데 내가 빨리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물었다.

노동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될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는 것보다 부자·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이 돈으로 더 나은 기초·국민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에게 더 이롭다.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조합원 의식조사” 중간 보고서에는 연금 개악 저지를 바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높은 염원이 잘 드러난다. 대체로 현장 조합원들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또, 언론의 연금 개악 논리에 당장 대응하기를 바란다. 특히, 대규모 집회 이상의 투쟁, 즉 총파업이나 연가파업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조합원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 실제 파업을 하면 참가하겠다고 답한 조합원도 절반 이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장 조합원의 정서를 실제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 ‘철밥통’ 논리 같은 비열한 갈라치기 공세에 맞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간 단호하게 파업을 벌여 박근혜에 반대하는 대중적 정서의 구실을 형성하고 노동계급의 힘을 보여 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 전교조는 물론 전체 운동의 사기를 높였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부터 정치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노동조합이 자기 부분의 이익에만 관심 두게 하려고 온갖 이간질 수작을 부린다. 투사들은 여기에 맞서 올바른 정치적 주장을 통해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그래서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에 맞서 ‘과연 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금 개악 저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2·25 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연가투쟁은 장차 진행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전국노조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박천석, 장호중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64쪽, 3,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제 가치는 점점 떨어질 전망이다.

여권은 공약 지키라고 하면 “왕창 퍼주자고 한다”(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며 아예 공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며 오리발 내밀던 것보다 더 뻔뻔해지기로 한 것이다.

때를 같이해 정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다수가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조작성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지를 보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은 언급도 없고, 정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설문지가 아니라 사실상 광고지였던 것이다.

여권은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 30퍼센트라고 해 봤자 소득인정액이 월 83만 원에 불과하다. 전혀 ‘부자 노인’이 아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도 운운한다. 세대간 이간질 논리다. 정부가 팽개친 노인들의 생계를 당장 떠안는 것은 많은 경우 바로 그 “미래 세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까지 차등 지급한다면 젊은 세대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청년유니온)이다.

재정 부족도 거짓말이다. 기업들이 금고 속에 쌓아둔 현금이 수백조 원이고, 이명박이 기업주들에게 감면해 준 법인세만 도로 걷어도 해마다 수십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감면해 준 법인세까지 걷으면 더 많다. 우파는 “이건희까지 20만 원 줄 돈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장한다.



연금은 ‘미래에 지급하는 임금’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박근혜가 공약을 뒤집고 누더기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는 인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러나 이진희에게 세금부터 제대로 걷고 불 일이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 역시 황당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면서도 수령액은 무려 33퍼센트나 줄인

것에 대한 분노를 달래려고 도입한 것이다. 원래 돈봉투 하나로 줄 것을 봉투만 2개로 나누면서 금액을 줄이더니, 이제는 아예 봉투 둘 중 하나만 받으라는 식이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노인들에게는 착취할 노동력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복지 중에서도 노동력 재생산 효과가 적은 노인 복지는 특히 아까운 것이다. 선거 때는 “경제강국 세계 10위 달성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공적 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은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식의 민간 연금으로 공적 연금을 대신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공적 연금을 무력화하고 싶어한다. 신자유주의 대표 주자인 세계은행은 “의무가입 연금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лай만 자발적 저축(민간 연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떠든다.

실제로 유럽에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자, 정부만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민간 보험이 흥했다. 사실상 민영화 효과를 부분적으로 낸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많이 낼수록 손해 보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비슷한 의의가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지난해에만 3만 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국민연금 탈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거짓 불안을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 도입 초기에 지불금이 불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화 정작하면 원래부터 ‘고갈’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처럼 말한다.

이처럼 박근혜가 공약을 뒤집고 누더기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

는 인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논리가 숨어 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도전하지 않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용익은 지난해까지도 ‘하위 7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달 20일까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해서 사실상 정부안이 통과될 길을 열어 줬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특히 연금에 민감한 공무원·교사 노동조합들이 싸워야 한다. 이는 단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007년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악한 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착수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위한 싸움은 모든 이의 연금을 위한 싸움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김종환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2월 초 교육부가 만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3백 분 수업을 강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로 환산하면 만3세 유아가 8교시 정규 수업을 듣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7~8세)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침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 8교시 수업은 유아 정서 발달에 해롭다. 사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누리교육과정도 이미 학습적인 요소가 많고, 방과후 과정은 사교육을 유치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학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지침은 무상보육의 비용과 책임을 사실상 유치원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교육과정 5시간에 방과후 수업까지 합쳐 8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



전교조로 거듭나는 유치원 교사들 1월 22일 전국 유치원 교사 대회.

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 되면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늘게 될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한 온종일반,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한 방과후 교실로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여기에

2012년부터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 행정에서 분리하는 바람에 유치원 행정을 1명 또는 2~3명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방과후 전담 교사가 10퍼센트도 안 되는 경기도 유치원 교사들은 주당 40시간씩 수업하고 일과 후에는 행정 업

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은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에 더해 방과후 전담 교사 확충, 행정 인력 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전국참교육실대회에 참가한 유치원 교사들 중 2백87명이 전교조에 가입했다.

이어서 지난 1월 22일과 28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유치원 교사 대회를 열었다. 1천 명이 넘는 유치원 교사들이 참가했다. 비조합원 유치원 교사들도 많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활력이 느껴졌다. 이들은 연사들의 연설에 크게 호응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유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

한 눈맞춤과 스킨십입니다. 수업 5시간 강제 지침은 시장의 논리, 공장의 논리를 유아에게 적용하는 폭력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통제하려는 정권의 폭력입니다.”

김근형 유치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유아교육과정 교시도 무시하며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5시간 지침을, 끝까지 싸워 철회시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정부의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나라에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육아 복지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확충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업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눈맞춤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가?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이 글을 쓴(1968년) 토니 클리프는 2000년에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다. 토니 클리프는 이제 고전이 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작 《대중파업》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이 가치를 인정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 약점도 지적한다.

원제가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고전적 저작만큼 대중파업에 관해 빼어나게 해설한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얇은 책에서 로자는 노동계급을 전투부대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사회를 변혁하도록 하는 데서 대중파업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다루고 있다.

1906년 8월에 쓴 이 책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1896~190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고양됐던 파업 투쟁의 물결을 개괄적으로 묘사한다. 1896년 5월 수도 페테르부르크의 섬유 노동자 4만 명이 총파업을 벌였고, 이듬해인 1897년에도 총파업이 있었다. 그 뒤 1902년 3월에 캅카스 지역의 석유 노동자들이 대중파업을 할 때까지 무수한 소규모 파업이 잇따라 일어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로스토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총파업을 불렀다. 1903년 5~7월에는 남부 러시아 전역이 불타올랐다. 바쿠, 티플리스, 바툼, 엘리자베스그라드, 오데사, 키예프, 니콜라예프와 예카테리노슬라프가 총파업 물결에 휩쓸렸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져 파업 운동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제정 육군과 해군이 일본 군대에 졌으므로 파업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하여 1904년 12월에는 바쿠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 소식에 제정 러시아 구석구석에 퍼지기 전인 1905년 1월에 페테르부르크에서 대중파업이 일어났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의 불길의 타올랐던 것이다.

“페테르부르크 사태에 크게 자극받아 프롤레타리아가 1월에 갑작스럽게 일으킨 총반란은 명백히 절대주의에 대한 혁명 전쟁을 선포하는 정치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전면적인 직접 행동은 훨씬 더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전기충격 같이 수많은 대중이 갖고 있는 계급 감정과 계급 의식을 처음으로 일깨워 줬던 것이다. 그리고 계급 감정을 자각하면서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자본주의의 사슬에 묶여 몇 십 년 동안 끈기 있게 견뎌 왔던 사회적·경제적 존재 조건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아주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깨닫

대중파업은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위대한 혁명 투쟁의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우며 충격적인 투쟁 형태이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대중파업은 더욱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된다.



로자 룩셈부르크

게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사슬을 흔들고 잡아당기려는 자발적·일반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근대 프롤레타리아가 겪는 수많은 고통을 보며 그들은 지난날의 피어린 상처들을 떠올렸다. 그리하여 한 쪽에선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다른 쪽에선 하청 노동에 맞서 싸웠다. 이쪽에선 야만적인 감독을 부대에 담아 손수레에 실어 쫓아냈고, 저쪽에선 악명 높은 벌금제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임금 인상 투쟁이 어디에서나 벌어졌고, 곳곳에서 가내노동 폐지 투쟁이 벌어졌다.”

경제적 대중파업은 제정의 경찰·군대와 충돌하게 됐고, 정치 파업으로 곧장 전환됐다. 정치 파업은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잠자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의식을 일깨웠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경제 파업을 벌였고, 이번에는 경제 파업이 정치 파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대중파업은 개혁주의(와 그 반대편에 있는 신디칼리즘)에 고유한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극복한다. 대중파업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지 않는 개혁을 위한 투쟁을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킨다. 대중파업은 현재를 미래 사회주의와 연결시키는 다리인 것이다.

대중파업 속에서 노동자들은 역사의 방관자 또는 연극 속의 병사이기를 그만두고,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고 스스로 변모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한편으로 혁명적 대중의 정치적 훈련과 그들에 대한 지도를 부르주아 정당이 떠맡고, 다른 한편으로 혁명이 단순히 낡은 정부의 타도 문제에만 한정됐던 기존의 부르주아 혁명에서는 단기간의 바리케이드 전투가 혁명 투쟁에 알맞은 형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동계급의 의식이 혁명 투쟁 과정에서 깨어나고 있고 노동계급이 자신의 세력을 정비하고 스스로를 지도해야 하며, 자본주의적 착취뿐 아니라 기존 국가 권력에도 대항해서 혁명이 진행된다. 그와 함께, 대중파업은 기존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타도하며 자본주의적 착취를 저지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투쟁으로 끌어들이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됐다. ...

“그러나 직접적인 대중 정치투쟁을 벌이려면 프롤레타리아가 먼저 하나의 대중으로 결집돼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은 공장과 작업장, 광산과 주물 공장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며 자본주의의 일상적 멍에가 그들에게 강요한 분열과 퇴보를 극복해야 한다.

“대중파업은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위대한 혁명 투쟁의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우며 충격적인 투쟁 형태이다. 자본



1996~97년 민주노총 파업.

과 노동의 대립이 발전하면 할수록 대중파업은 더욱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된다. 앞서 일어났던 부르주아 혁명들에서 주된 투쟁 형태였던 바리케이드 전투와 무장한 국가 권력에 맞서 일으키는 공공연한 충돌은 오늘날 혁명에서는 단지 프롤레타리아 대중 투쟁의 전 과정에서 절정이나 한 계기일 뿐이다.”

경제적 개혁을 위한 부분적 투쟁과 혁명을 위한 정치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다고 보는 개혁주의자들과는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적 시기에는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성장·전화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동은 한 방향으로만, 즉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인다. 모든 중요한 정치적 대중 행동은 그 절정에 다다르고 나서는 일련의 경제적 대중파업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런 법칙은 하나하나의 대중파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일반에도 적용된다. 정치투쟁이 확산돼 명확해지고 강화되면서 경제투쟁은 후퇴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조직화되고 강화된다. 이 두 가지 투쟁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정치투쟁의 모든 활발한 공격과 승리는 경제투쟁에 강력한 자극을 준다. 이

것은 정치투쟁의 활발한 공격과 승리가 노동자들에게 처지 개선을 위한 싸움으로 시야를 넓혀 주고, 또 싸우려는 충동을 강화시키며,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 행동의 물결이 고양된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경제투쟁의 싹을 틔우는 기름진 퇴적물이 남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이 휴지기를 맞이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지명해 준다. 말하자면,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언제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노동계급 역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다. ...

“한마디로 경제투쟁은 운동을 하나의 정치적 초점에서 다른 초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다.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의 토양을 주기적으로 기름지게 한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끊임없이 자리를 바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시아에서 대중파업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투쟁, 즉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현학적인 도식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분리되거나 서로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서로 얹혀 있는 두 측면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대중파업의 논리적이고도 필연적인

절정은 “공공연한 봉기인데, 이것은 일련의 불완전한 봉기들 — 터전을 닦으며, 그래서 당분간은 부분적 ‘패배’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기도 쉽고 또한 각각의 봉기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 의 정점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정신적 성장

로자 룩셈부르크는 “급변하는 혁명 물결의 썰물과 밀물 속에서 가장 지속적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정신적 성장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지적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이후에 불가피한 경제·정치투쟁들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더한층 발전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썼다.

또한 노동자들은 얼마나 높은 이상으로 도약하는가! 그들은 투쟁하는 동안에는 그들과 그들 가족을 부양할 생계수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린다. 그들은 사전에 모든 기술적 준비들이 돼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대중파업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대중의 이상주의를 한꺼번에 작동시켜, 그때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을 대중이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서 심각한 고통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23일 동안 지속하며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한 철도 노동자가 〈레프트21〉에 말했듯이, 철도 파업은 “이명박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눌러 왔던 [철도 노동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1월과 2월에 삼성 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월 25일로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다.

철도 파업은 다른 사회 세력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대학생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을 벌이며 철도 파업을 지지했다. 한홍구 교수 등 저명한 진보 지식인들은 “단절된 노동계와의 고리를 복원해 함께 싸워 나가”기 위해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노동자 파업의 고유한 힘에 주목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사태 발전을 크게 환영한다.

한때 진보진영에서조차 파업은 낡은 방식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사용자들은 파업을 극도로 비난하고 탄압한다. 철도 파업 때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언론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도 파업의 힘을 우려해서다.

파업은 왜 일어나는가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 그래서 임금, 노동시간, 고용 안정 등 노동 조건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자기 가족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이고, 좁지 않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살게 하고, 말끔한 옷을 입히기 위해 되도록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이윤을 얻으려고 자본을 투자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노동자 임금으로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얻는다. 임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용자들의 이윤은 커진다. 따라서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 시간을 둘러싼 갈등도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다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을 빈둥빈둥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갈등의 세 번째 기본 쟁점은 고용 안정이다.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이윤이 충분히 보장될 때만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한다. 그들은 때때로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한 작업 방식이나 새 기술을 도입한다. 또, 불황 때나 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이윤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인력을 감축하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때로는 다른 나라로 사업을 이전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실직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이런 대립과 갈등은 생산수단(기계·설비류와 원자재 등)을 지배하는 기업주들과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로 사회가 분단돼 있는 한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그래서 파업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운동이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파업의 역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파업은 탐욕스러운 집단 이기주의 행동도, ‘불순 세력이 사주·횡책’하는 행동도, 비정상성을 대표하는 낡은 관행도 아니다. 파업과 그 밖의 노동쟁의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징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파업의 효과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핵심 수단이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힘이 없다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장기간의 졸로로 안 볼 것이다.

파업은 다른 어떤 노동쟁의 방법보다 효과가 크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의 이윤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파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지 금전적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더는 고분고분한 임금 노예로 있기를 거부하고, 자신감을 갖고, 단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한 철도 노동자는 〈레프트21〉에 이렇게 말했다.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도 성과이고, 지금 조합원들의 사기도 괜찮다.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누르려고 하는데,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활기가 있다.”

물론 파업이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파업은 엄하고 힘든 경험이다. 또한, 파업 참가자들은 임금 손실로 적어도 어느 정도는 희생과 곤경을 겪는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빈곤을 체득하고 있는 노동자가 처자와 떨어져서 몇 달씩이나 기아와 빈곤을 참아내고 확고부동하게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도 파업은 사용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위협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력을 감축하

려는 사용자들의 시도에 파업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나 고용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성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익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급속하게 변화시킨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자신이 생기게 된다.

엥겔스는 파업에 깊은 관심을 보인 최초의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당시에 노동조합과 파업을 무시하는 프랑스의 공산적 사회주의자 프루동에 맞서 파업의 의의를 적극 주장했다. “파업은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훈련장이며,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는 대전투를 그들에게 준비시킨다. 파업은 일단의 노동자가 노동계급의 대의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다.”(《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한 철도 노동자도 비슷한 말을 〈레프트21〉에 전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 어떤 노동 강도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은 셈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눈을 뜨게 한다. 평소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 등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도록 강요받는다. 노동자들은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각은 바뀐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직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기업주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다른지, 언론과 정부의 구실이 무엇인지, 또한 사회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노동자들은 또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오래된 편견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파업은 사회주의적 개념을, 즉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이라는 생각을 노동자들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불러일으킨다.”

파업은 파업 참가자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파업은 다른 직장으로 투쟁을 확산시키는 **연대의 초점**이 된다. 철도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노동자들이 파업 지지 기금을 모았고, 화물 노동자들이 대체 수송을 거부(블랙킹)했으며, 민주노총은 12월 28일에 하루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2월 말에 민주노총 파업에 이르기까지 다른 노동자들의 일부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자본가들이 파업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분석하며 《대중파업》을 썼다. 1905년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행진하는 노동자들.

로자 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이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해 설명한다. 그리고 로자는 대중파업이 부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같은 다른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는 경향도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로자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고용주들과 그 국가의 이해관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은 심각한 약점도 있다. 《대중파업》은 보수적 노동조합 관료가 대중 투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과소평가한다. 로자는 대중 봉기가 일어나면 운동 자체가 심각한 해를 입지 않고서도 보수적 지도부가 제거될 것으로 봤다. 로자는 1906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독일에서 어느 때 어떤 이유에서든 대중 행동이 대규모 정치투쟁이나 대중파업으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강력한 노동조합 투쟁 시대가 독일에서 시작된 것이고 사태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 운동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아랑곳없이 진행될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운동에 비켜서 있지 아니면 운동에 저항하려고 하든,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비슷한 경우의 당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황의 소용돌이 속으로 간단히 휩쓸려 버릴 것이고, 대중의 경제·정치투쟁들은 그들 없이도 진행될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거듭거듭 얘기했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역사가 매우 짧고 관료가 비교적 허약했던 러시아에서조차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노조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과 노조 내부의 우파와 멘셰비키의 영향력이 분쇄됐다.

1905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는 노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01년에 주바토프라는 경찰 간부가 일종의 노조를 조직한 게 고작이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그 노조를 가리켜 급속노동자상호공제회라고 불렀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체들

이 결성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이 단체들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해산됐다. 참된 의미의 노조는 1903년에 결성된 인쇄공 노조였다.

볼셰비키는 10월 혁명 직전에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의 소비에트, 주요 산업의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 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인쇄공 노조와 철도노동자협회 그리고 우편·전신조합은 장악하지 못했다. 혁명이 승리한 뒤에야 겨우 14년의 역사를 가진 인쇄공 노조의 관료를 비로소 분쇄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인쇄노조(SOGAT)가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2백3년 동안 존재해 왔고, 전국식자공협회(NGA)는 2백50년 동안이나 존재해 왔다! 제정 러시아에서 노조 관료는 시베리아에서 [유형으로] 최후를 맞이하곤 했지만, 영국에서는 상원의원이 된다.

사회민주당뿐 아니라 노조에서 관료가 갖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했기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적 정당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은 1905년 러시아와 폴란드의 혁명적 대중파업들, 1920년 이탈리아의 공장점거, 1936년 프랑스의 공장점거, 1956년 헝가리 총파업 그리고 1980~81년의 폴란드 연대노조를 이해하는 열쇠다. 1909년 스웨덴, 1913년 벨기에, 1926년 영국의 관료적 대중파업들과 1984~85년 영국의 광원 파업 그리고 1985년 덴마크 총파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관료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성격을 알아야 한다.

물론 관료적 대중파업과 자발적인 대중파업 사이에 관리장성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노동자들은 극심하게 통제받는 파업에서조차 관료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나 관료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혁명적 노동자 당은 관료적 파업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닌 불멸의 힘은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체임을 확고히 믿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김영익

올해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량 살육 속에 무려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이 바로 1백년 전의 유럽과 비슷하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 총리 아베의 입에서 나왔다. 아베는 1월 22일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1914년 당시 경쟁 관계이던 영국과 독일이 지금의 중국·일본처럼 매우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결국은 충돌했다며, 오늘날의 동아시아가 제1차세계대전 당시의 유럽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발적인 수준에서나 부주의한 방식으로 갑자기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아베 같은 우익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논설위원 마틴 울프나 전(前)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같은 서방의 저명한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도 동아시아 상황을 1백 년 전 유럽과 비교하면서 걱정했다.

비슷한 상황

동아시아의 현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가 그저 황당한 유비(類比)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일본 아베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집단적 자위권 채택을 천명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선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움직임에 밀착 감시하던 미국 순양함 카우펜스함을 중국 군함이 저지하려고 접근했다가 충돌 직전까지 간 사건이 일어났다. 1월 31일에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실탄을 탑재한 중국 수호이 전투기 2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온 일본 전투기를 쫓아, 양국 전투기들이 장시간 공중 대응전을 펼쳤다고 한다.

2월 4일 일본 총리 아베는 “외국의 조직적 공격을 뜻하는 ‘유사사태’에는 이르지 않는 ‘회색 지대’의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색 지대’에는 어민으로 위장한 게릴라가 섬을 점령하는 등의 상황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중국 민간 선박이 접근하면 일본 해상보안청(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이 아니라 해상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사태 전개는 미국·일본과 중국 간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마틴 울프 등이 경제 대국 통치자들에게 상황을 ‘오판’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강대국 정부 최고위층의 호전성과 ‘오판’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의 ‘아시아 귀환’, 일본 아베 정권의 강경 대외 정책 표방, 중국 시진핑 정권의 등장 등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강대국 통치자들이 내리는 호전적인 ‘오판’의 근본적 원인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논리가 바로 제국주의 경쟁과 충돌을 부르는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1차세계대



주요 열강들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긴장이 감도는 동아시아 바다 미국이 일본에 새로 배치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2013년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단위: 억 달러 (괄호 안은 전 세계 국가별 국방비 지출 순위)



전의 비극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점이다.

제1차세계대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 축적을 위한 자본·국가 간 경쟁이 어떻게 끔찍한 파국을 낳는지를 보여 줬다. 자본들의 경제적 경쟁은 1870~80년대 대침체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 간의 영토 확장 경쟁으로 나아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국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앞다퉈 투자처, 연료 산지, 군사적 요충지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영토 확장 경쟁에서 성패는 군사력이 좌우했다. 그리고 군사력 경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열강들의 충돌을 낳았고, 끝내 제1차세계대전까지 일으켰다.

내재적 논리

비록 과거와 달리 지금 식민지 확보 경쟁은 없지만,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들이 갈등을 빚는 동역학은 제1차세계대전 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세계경제의 불균등 발전과 모순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동성 자체가 이러한 불균등성의 분포를 바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끊임없이 바꿔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열강들 간의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레닌 시대에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 독일과 미국의 부상에 직면했다면, 오늘날 국가 간 세력균형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식민지를 거느리지 않은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강력한 공업과 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주물러 왔다. 그리고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우위와 전 세계에 걸친 해외 군사 기지 네트워크로 유라시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주요 해상교통로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편,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자 세계 1위의 수출 대국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를 낳았다.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은 중국 지배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엄청난 양의 원유를 뺏아들이는 중국 경제에 안전한 원유 수송로 확보가 필수적이고, 대외 무역이 많은 중국 경제에 해상교통로 확보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지나 중국 본토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80퍼센트와 대외 무역의 90퍼센트를 이 길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줄곧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배하는 상황을 불만스럽게 여겼고, 중국 근해에서 미군을 태평양의 훨씬 동쪽으로 밀어내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은 두 대국[미국과 중국]을 포용할 수 있을 만

큼 넓다”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의 발언에 담긴 진정한 속내다.

반대로 중국의 해양 팽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한테 커다란 도전으로 보인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인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다.

이것이 오바마가 “아시아 귀환”을 천명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늘리고, 이 지역의 동맹들을 다잡기 시작한 까닭이다.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이 요즘 부쩍 동아시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외치곤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주도해 온 역대 질서를 중국에 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공고히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면전?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1백 년 전의 유럽처럼 강대국 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아직 세계경제의 상태와 강대국 간 갈등의 정도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을 일으킬 정도로 악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때는 경쟁 관계인 영국과 독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서로 엇비슷했다. 반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초강대국 미국이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군사와 경제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 예컨대 미국은 항공모함이 무려 11척인 데 반해, 중국은 이제 겨우 1척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남한·호주 등 지역 동맹들을 끌어들이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간질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

즉,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장을 내밀 처지가 못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면전 가능성은 아직은 상당히 억제돼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논평가들처럼 강대국 간의 대규모 충돌은 이제 과거지사라는 선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 19면으로 이어짐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김영익·이현주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128쪽, 4,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아르헨티나 혁명적 좌파들에게 찾아온 기회

2013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아르헨티나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큰 성공을 거뒀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혁명적 세력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약점도 있다고 두 명의 아르헨티나 사회주의자들인 CM과 ICM가 주장한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자가 첨가한 말이다.

아르헨티나 민주화 30주년이기도 했던 지난해, 10월 말에 열린 총선에서 트로츠키주의 정당들의 선거 연합이 5퍼센트 이상(모두 합쳐 1백15만 표)을 득표했다.

‘좌파와 노동자 전선’(스페인어 약칭으로 FIT)이라는 이름의 이 연합은 몇몇 주요 지역에서는 전체 득표율인 5퍼센트보다 훨씬 더 많이 득표하기도 했다.

산타크루스에서는 10퍼센트를, 살타주(州)에서는 19퍼센트를 득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市)의 여러 선거구와 멘도사 주, 투쿠만 주, 차코 주, 코르도바 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훌륭한 득표 결과 덕분에 트로츠키주의적 좌파들은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세 명 배출할 수 있었고, 지방의회 의석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집권 세력인 페론주의자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 것이 이런 약진의 배경이었다. 페론주의 정당의 득표율은 2011년에는 54퍼센트였는데 2013년 10월에는 32퍼센트로 떨어졌다. 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와 그의 남편이자 전임 대통령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지난 10년 이상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했다.

아르헨티나 자본주의는 2000~01년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고, 2001년 12월 대중 항쟁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온 아르헨티나에서 트로츠키주의적 좌파들의 연합체 ‘좌파와 노동자 전선’은 투쟁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한다.

이 일어나 몇 달 안에 대통령 다섯 명이 물러났다.

키르치네르 부부는 아르헨티나 자본주의를 회생시켰는데, 이는 아시아(특히 중국) 발(發) 원자재 시장 호황에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특정 부르주아 집단의 지지를 받아 산업화를 다시 시작하고자 했다.

키르치네르 부부는 고용 수준 개선(그럼에도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은 계속 높았다)에 일조한 중소기업들의 지지도 받았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오자 페론주의도 위기를 겪었고, 좌파에게 공

간이 생겼다.

키르치네르 세력과 연계가 없는 중도 좌파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신자유주의 우파와 동맹을 맺은 것도 한 요인이었다. 그 덕에 그들에게 갈 표 일부가 FIT로 왔다.

FIT를 결성한 것은 집권당이 2010년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의 영향을 받은 일이기도 하다. 이 선거법 개정은 우파 정당들에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2퍼센트 이상을 득표하도록 규정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우익 정당뿐 아니

라] 주요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인 PO(노동자당), PTS(사회주의를 향한 노동자당), IS(사회주의 좌파)는 선거에서 존재감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선거 연합을 꾸리게 됐다. 비록 아르헨티나 트로츠키주의 경향의 오래된 악습(종파주의)으로 말미암아 New MAS(사회주의를 향한 새로운 운동, IS를 비롯한 소수 정당들과 선거적 영향력이 비슷하다)를 연합에서 배제했지만 말이다.

아르헨티나의 트로츠키주의적 좌파들은 대부분 종파주의(때때로 기회주의와 결합됐다)와 이론의 무미건조함으로 약

명 높았다. 그러나 FIT가 페론주의에 반대하는 주요 우파 야당인 급진당(UCR)은 물론 키르치네르 세력들에 대한 대안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성 정당들에 대한 항의

FIT에 대한 투표는 [기성 정당들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있었다. 물론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전투적으로 거리 행진을 벌이고 노조, 지역사회, 학생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FIT에 투표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FIT에 투표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며 트로츠키주의적 좌파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 운동과 노동자 운동 수준이 질적으로 전진한 덕에 FIT의 득표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FIT로 왔듯이 미래에는 다른 세력에게로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선에서는 다시 FPV[승리를 향한 전선, 키르치네르 부부가 속한 페론주의 정당을 찍을 수도 있고, 다른 선거에서는 중도 좌파를 찍을 수도 있다.

FIT의 선거 강령이 특별히 급진적이지는 않았다(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NPA의 강령이 훨씬 더 급진적이다). 그러나 FIT는 그 나름의 투쟁의 역사가 있고, [특히 그들이 주도한] 노동조합 운동은 전투적이었던 것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FIT는 국회에 좌파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FIT가 전통적 약점을 극복하고 피억압자들을 위한 투쟁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변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중요할 문제일 텐데, 지금 그럴 기회가 생겼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4년 1월호 / 번역 차승일

▶ 18면에서 이어짐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헤게모니 아래서 경쟁 제국주의 국가 간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이 점차 치열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일본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어느새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버렸다.

진행중인 경제 위기는 이 모든 갈등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밀어올려 버릴 수 있다. 경제 위기는 잉여가치를 둘러싼 자본 간 경쟁을 더 첨예하게 만들고, 이것이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을 격화시킬 공산이 큰 것이다.

우리는 제1차세계대전이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 낳은 파국적 결론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보불전쟁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전까지 서유럽은 44년 동안 주요 국가 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다(소위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 그런데 이 시기는 단지 평화롭기만 한 때가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엄청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었다.

지금의 동아시아도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이 축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경쟁의 수준은 빈국이거나 한 때 빈국이었던 “불량국가”를 열강이 응징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섰다. 경쟁 제국주의 국가와 공공연하게 대립하는 상태로 나아간 것이다.

동아시아 주요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비록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호에서 이륙하는 중국 전투기.

경제 위기 때문에 군사비를 대폭 줄여야 할 처지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군사력만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신형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로 교체했고, 또 다른 항공모함 시어도어 로즈벨트호도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배치한 미국의 신형 연안전투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도 해병대 구실을 할 수륙기동전단을 최대 3천 명 규모로 창설하기로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래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해병대

같은 공격 부대는 보유하면 안 되는데도 말이다.

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꾸준히 군비를 늘려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어느새 영국·독일·프랑스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커져 있다.

볼드모트

최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의례적인 외교적 체사는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영국에서 벌어진 “볼드모트 논쟁”일 것이다. 볼드모트는 《해리 포터》 시리즈 속에 악의 마법사를 말한다. 해리의 부모를 죽인 악당이자 해리의 숙적이다. 지난 1월 영국 주재 중국 대사와 일본 대사

가 상대국을 “볼드모트”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을 현지 신문 〈데일리 텔러 그래프〉에서 주고받으며 유례 없는 지면 논쟁을 벌인 것이다. 그만큼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과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 사이에 적대감이 상당한 것이다.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주요 강대국 간의 ‘파국’을 막아 왔던 기존의 합의나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다오 위다오(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대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중국과 일본의 밀약은 2010년 이후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일본이 올해 ‘집단지 자위권’을 채택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서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고 더 나아가 평화헌법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이 지역은 더한층 불안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당장 제국주의의 간 전면전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긴장과 일시적 이완이 갈마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이 와중에 소규모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반도도 안심할 수 없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 때문에 한반도도 북한 핵·로켓 문제나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등 온갖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도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간 전면전이라는 비극을 피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으리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매우 우울한 미래만 존재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저항으로 종전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유럽의 동부전선 전쟁을 끝내 버렸고, 1918년 독일 혁명은 서부전선에서 포성을 멈추게 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노동계급이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 남한에서는 노동계급이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우리는 중국 노동계급의 저항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급의 파업과 저항은 꾸준히 성장하며 중국 노동자들은 의식과 조직을 키우고 있다.

이런 사태 전개는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지배자들의 분열 등과 맞물려 엄청난 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 최근 중화권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고위 관료들이 모인 베이다이하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당면한 내외외환의 상황이 1948년 국민당이 직면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며 언젠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고 한다.

따라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산물임을 이해하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면,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 현장에서 시작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의 가능성이 보일 때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신흥국 경제 위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연초부터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1월 중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는 18.7퍼센트나 떨어졌다. 최근 1년간은 38퍼센트나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위기가 외채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페소화 폭락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달 말 기준 2백82억 7천만 달러로 지난 2006년 10월 이래 가장 적다.

페소화 급락 때문에 빚어진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동결 조치를 취했지만, 1월 하순 단 열흘 동안 쇠고기 가격은 20퍼센트, 의약품 가격은 50퍼센트 급등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10.9퍼센트이지만, 생필품 가격 등 민간부문 인플레이션은 무려 28.3퍼센트에 이른다.[아르헨티나의 좌파에 대해서는 19면을 보시오]

위기는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제 분석 기관 '이머징 포트폴리오펀드 리서치'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까지 신흥국 증시에서 모두 1백22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1월 마지막 주 이탈 규모는 2011년 8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였다.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터키는 기준금리를 4.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무려 두 배 이상으로 인상했고, 인도·브라질 등도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1월 말 미국이 월 7백5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6백50억 달러로 줄이자 금융 불안은 동유럽과 선진국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러시아·폴란드·체코 등의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캐나다 달러화와 노르웨이 크로네화의 가치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월 미국·영국·유럽·일본의 4대 증시가 동시 하락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증시가 2010년 이후 최악의 1월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배경

이번 위기는 신흥국에서 발생했지만 그 뿌리는 신흥국에 있지 않다. 경제 규모가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 배경에 있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GDP가 매년 9~10퍼센트씩 성장하며 세계경제의 엔진 구실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2013년 7퍼센트대로 둔화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막대한 '그림자 금융'의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동안에는 중국에 1차 자원을 수출하는 여러 신흥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돈들이 이런 신흥국들로 물려들며 거품이 형성됐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자, 신흥국으로 몰려든 자금이 빠지며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1월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반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는 신흥국 통화까지 급락의 도화선이 됐다. 1월 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위기는 더 심화됐다.

많은 경제 평론가들이 2014년에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회복은 아직 중국의 실물 경제 성장 둔화를 만회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보도가 많았지만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1.9퍼센트로 2012년의 2.8퍼센트보다 둔화한 것이었다.

2013년 말 미국의 실업률은 6.7퍼센트를 기록해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아예 구직을 포기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활동에서 제외된 인구는 2009년 8천1백만 명에서 지난해 12월 9천2백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3년에 JP모건 경제학자들이 낸 세계 기업 수익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지난 3년여간 정체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율도 경제 위기 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지만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제공된 값싼 자금은 실물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흘러 들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주택담보대출채권(MBS)을 직접 사들이는 초유의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이 다시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2013년 11월 미국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7퍼센트 상승하며 8년 내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거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있고 이것이 신흥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전망

이번 사태가 1980년대 초반이나 1997년처럼 신흥국의 도미노 외채 위기로 이어질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흥국 경제 위기는 극심한 물가 인상을 낳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만약 외환위기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는 그때보다 더욱 클 것이다.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전보다 더 커졌고, 이번 신흥국 위기는 2008년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각한 외채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흥국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만성적으로 재발하며 불안정하게, 때에 따라 요동칠 가

능성이 크다. 이런 신흥국 경제 위기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미국 경제의 기반도 잠식할 것이다.

연초에 많은 경제평론가들이 올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신흥국 위기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정선영

한 은행 노동자가 말한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결과

이번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운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부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정보 취급 소홀과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태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의 핵심 업무인 전산·보안 부분을 외주화하고, 대졸모집인 제도 등 외부 용역

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된 결과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이 개인에 대한 무한한 정보를 보유하려고 한 것이 문제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빅데이터 산업이다. 빅데이터란 나이, 성별, 구매 이력 등 개인의 수많은 정보를 집합해 이로부터 개인의 관심사나 구매 가능성을 찾아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버려졌던 데이터들(SNS, 이동 정보, 제품 사용후기 등)을 저

장하고 분석해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보다 기업들은 훨씬 빠르게 이 기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유통업체는 빅데이터 기술로 한 여고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해 누구보다 먼저 그 여고생의 임신 여부를 알아내 임신용품 카탈로그를 보낸 사례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CJ One이나 SK One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비 패턴이나 이력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 파악을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과 세밀한 정보를 확보해 저항을 억누르려는 데 활용하려는 국가에게 빅데이터는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이윤과 통치를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결국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여기는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이다.

김동규

새로 나온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노동자연대다함께, 74쪽, 3,000원



《혁명적 신문》

크리스 하먼 지음, 정진희 옮김
노동자연대다함께, 88쪽, 3,5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2월 4일 '내란음모사건 정치구형 규탄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김문성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한동근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 등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최대 형량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장악을 위해 지난해 그토록 무리수를 썼던 박근혜가 검찰의 20년 구형을 통해 재판부(사법부)에게 확실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검찰’

이는 진보당 위원장 해산청구 심판 변론을 시작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신호이기도 하며,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판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협박인 것이다. 진보당 해산청구 현재 변론에는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직접 나서 민주주권론 등을 공격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12일의 ‘합정동 토론’을 두고 유사시 북한 군대와 협조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의 토론이었다며 구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RO가 어떤 단체인지, 북한과 연계가 있는지, 구체적 무장행동을 합의하고 준비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야말로 유신 스타일이라 할 만하다. 증거도 못 내놓고서 “사회와 격리해야 할” ‘중죄’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니 말이다. 증거가 없으니 더 위험하다는 식의 검찰 구형 논리는 근대 사법의 기초 원리인 “증거재판주의 원칙”도 내팽개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

왜곡·과장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요원에게 “절두산 성지와 결전 성지는 글자 수가 달라 오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녹취록을 20~30번씩 들었다고 했는데 의도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다.

이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김철준 변호사도 이런 왜곡·과장에 항의했다. 그는 1월 초 재판 뒤 “언론에 유출됐던 녹취록은 몇몇 어휘가 침소봉대됐고, 잘못 녹취된 것도 확대 과장돼 마치 엄청난 내란 음모가 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4백50군데 이상 잘못 녹취된 부분이 발견됐다”, “[이석기 의원이 쓴 ‘물질·기술적 준비’란 용어는] 반전평화운동의 실천, 효율성 등 여러 가지로 만들 어질 수 있는 개념(이므로) 마치 적극적으로 무장 투쟁을 전개, 봉기를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왜곡·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오마이뉴스)1월 7일)

이번 검찰의 구형 논리는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판결한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 판결과도 대비된다.

권은희 과장 등의 증언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김용판에게 징역 4년만을 구형했다. 이런 말랑말랑한 뜻을 전해 받은 재판부는 ‘드러난 증거로는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대선 개입 ‘의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면, 내란 음모의 물증이 없는 진보당 활동가들은 더더욱 무죄 석방돼야 할 것이다.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사상과 토론, 표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북한과 직접 연락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으나, 대한민국 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이것도 구속·기소된 진보당 활동가들과 북한의 연계를 밝혀내려다 실패한 검찰의 궤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치자들의 진정한 본심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도 있다.

독자적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옥죄고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런 점을 때문에 ‘내란의 예비·음모 등에 관한 죄’ 조항도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성격의 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동안 내란 음모는 국가보안법과 다르다는 논리로 방어를 거부하거나 사상의 자유 문제로 보서는 안 된다는 착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모호한 ‘사상탄압법’ 성격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좌파들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본색 드러내기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기구의 강경화 추세는 국내에서 경제 위기, 지정학적 위기 등을 배경으로 자라나는 통치자들의 위기감과 초조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몇 년간 대체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미국 정부의

양적완화 덕을 보며 버텼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에서 나홀로 탈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서 비롯한 최근 신흥국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종속변수

이런 처지에 국가재정 문제가 시급한 쟁점이 됐다. ‘공공부문 정상화’와 ‘민영화’ 문제가 시급해진 이유다. 한국 정부 자신이 경기부양으로 인플레이를 용인했으므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커져 왔다.

이런 다급함 때문에 박근혜는, 한두 해 전부터 조금씩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조직 노동운동 전반을 동시다발로 공격해

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로선 노동운동과 본격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견제구를 날려야 할 뿐 아니라, 급진 좌파들의 노동운동 개입에도 대처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갈수록 대안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는 친북사상을 단죄의 이유로 내세웁으로써, 탄압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고 심지어 진보정치 세력 안에서 분열을 유도하려 한다.

이에 더해, 남한 통치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대북 적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상황이 주는 효과도 무시해선 안 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각별히 친북사상을 문제 삼아 남북 간 전쟁시 내부 반

란 위험을 과장한 것도 시사적이다.

그러므로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간 갈등 모두에서 종속변수인 한국 통치자들의 불안감은 ‘외부 위협과 연계된 내부 세력’이라는 속죄양을 계속 찾게 만들 것이다.

최근 ‘NLL 발언’을 이유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를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탄압과 최근 우익의 공세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가 불충분해도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기대하기는 힘들다(선고일 2월 17일). 만에 하나 내란 음모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은 단호하게 내란음모 피고인들의 처벌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 다행히

10만여 명이 구속자 석방 탄원 운동에 동참했다.

2·25 총파업

초조해진 박근혜가 조직 노동운동 곳곳을 동시에 공격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저항이 일반화된 전국적 저항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박근혜는 그럴수록 신경질적으로 나올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그랬듯 이번에도 박근혜의 교란·위축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2·25 총파업’ 등 자신의 의제를 앞세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좌파도 기여해야 한다.

그런 투쟁이 성공적일수록 저들의 강경한 공세는 그 쓸모를 잃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뉘,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매우 미흡)을 두 차례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 감축안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 시스템과 사학법인들의 부실과 부패, 턱없이 적은 정부 지원 같은 핵심 문제를 나둔 채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학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압박하려 한다.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월 29일 발표에는 평가방식과 평가지표, 반영 비율,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발표를 미룬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등급 확정과 전체 대학 정원 감축 계획 발표를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 자세한 대학 평가 방안은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듯하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일정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2월부터 국회에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사학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적어도 두 가지 포함된다.

하나는 정원 감축으로 대학이 지켜야 할 교육용 재산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남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즉, 등록금으로 만든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재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패 사학에게는 특혜, 학생과 교직원에게 고통 떠넘기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대학을 정리할 경우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학의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인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교육법인에게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게 하는데,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실사학들의 먹튀를 허용하며 국고를 축내는 것이다.

구조조정 추진을 내세우며 저투자자료를 부실하게 만들고 고액 등록금으로 배를 불려온 사학법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파렴치한 것이다.

먹튀

3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화하고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가혹이나 심각한 대학 서열화를 더욱 부추기고 서열중하위권 대학들에 더 큰 구조조정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는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2003~2012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총액의 42.5퍼센트를 상위 10개 대학이 받았다. 그 가운데 연세대·고려대 두 대학이 받은 금액이 무려 15.4퍼센트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평가는 부유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소수 사립대학들에 국고 지원을 집중해 온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고등교육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대학 운영 예산 지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각종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면 대학 당국의 꿈수나 관료주의만 강화되고 애꿎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기 십상이다.

대학 경영진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방법은 교직원 임금 삭감이나 해고다. 최근 몇 년 새 찾아진 대학 구

구조조정으로 청소 노동자나 시간강사 같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대학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교수와 직원들 사이에서도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고른 지원

그리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을 기업을 위한 인력 양성소나 연구기관이 되도록 더욱 부추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들이 기업들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 학과와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특성화' 정책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실업난을 대학 교육 탓으로 돌리며 정부와 기업주들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대학교육을 더욱 편협하게 만든다.

향후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

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에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면 개별 대학들은 비인기 학과 위주로 정원을 줄이면서 학과 통폐합을 시도할 게 불보듯 뻔하다. 이는 인력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기 쉽다. 기업들의 단기적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 통폐합이 잦아지는 경향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교육기관의 장기적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노동계급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 비리 부실 사학에게 특혜를 주려는 입법 시도도 좌절돼야 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대학들의 법인을 퇴출하며 국공립화하고, 소수 대학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에게 국고 지원을 크게 늘려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진희

개강맞이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세계경제와 신흥국의 위기 - 자본주의는 어디로?

아베 신사참배, 센카쿠 분쟁, 중미 갈등 - 고조하는 동아시아 갈등과 제국주의

왜 노동자 투쟁이 중요한가?

일시: 3월 15, 16일 / 장소: 추후 공지

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께)

참가비: 하루 5천 원, 이틀 8천 원 / 새내기 하루 4천 원, 이틀 6천 원

참가문의: 010-5678-8630





교육을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만드는 살인적 등록금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도 먹튀 하려 한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절감'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할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인하한 대학도 0퍼센트대 인하를 해서 인하 액수가 5천 원에서 1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등심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일부 강화했음에도, 학교 측 위원이 학생 측 위원보다 더 많아 학교 측의 등록금 '절감' 인하안이나 동결안을 의결시키는 거수기로 전

락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는 총학생회가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의 동수를 요구하며 등심위 참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물론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이 동수라 해도 이사회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인상된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등심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등심위에 의존하지 않고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 7조 원 중 4조 원은 정부 지원으로, 3조 원은 대학들의 자구적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목표액보다 모자란 6천8백여 원만을 증액했고 대학들의 자구적 등록금 인하도 전혀 유도하지 못했다. 각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감점되지 않으려 인상을 피했을 뿐이다. 정부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예산이 5천 5백억 원 더 투입돼야 하고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20퍼센트가량 인하해야 한다.

실질적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국가장학금이 늘어나 거의 반값등록금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립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은 7백36만 원 가량인데 정부는 소득 2분위 이하인 학생들에게만 4백50만 원을 지급할 뿐이다.

학점 제한도 심해 성적이 B학점 미만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면서 'C학점 경고제'를 내놔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에게만 C학점 한 번은 눈감아 주겠다는 미봉책이다. 이런 성적 제한 규정 때문에 모순되게도 저소득

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떨어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아르바이트 병행 등으로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각 대학들이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를 막는다고 학칙을 개정하고 성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A, B학점의 비율을 줄이거나, 재수강을 금지하거나, 학사경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국가장학금의 성적 제한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장학금의 기준은 가정의 재정적 형편이어야 한다.

또,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제외되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1, 2유형과 다자녀장학금 모두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들로 국가장학금이 소폭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 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007년에 건위 2013년에 11배나 급증했다. 소득 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에게도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큰 부담이다. 소득 분위가 8분위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를 통제하는 효과가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들이 매년 예산 불풀이기를 통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인하할 수 있는데도 인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제한하는 고지서상의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돼야 한다.

이아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공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한국방송통신대 등 전복지역 국립대 학생 94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단체의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 감독을 회피하

는 법적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인정한 것처럼, 국공립대 기성회는 등록금 징수의 명분일 뿐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었다.

만약 이런 판결이 전국의 대학 기성회에 적용된다면 학생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3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법원은 모순되게도, 학생들이 국가에 물은 책임은 모두 기각했다. 모든 책임은 유령 조직인 기성회에 있다는 것이다.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징수한 주체가 사실상 국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이 틈을 타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비겁한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쟁점을 희석시키고 학생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고액 등록금의 책임이 교직원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간질을 통해 고액 등록금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수당과 기성회 직원 임금 전체를 삭감하라고 전국 국공립대학들을 압박했고, 지난해 말에는 교육부 지침에 반발하는 국립대 직원들을 엄중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기성회비의 대안이라면서 '국공립대학 재정회계

법'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정회계법의 핵심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시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애는 대신 등록금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게다가 적립금 축적과 수익 사업을 허용하고,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총장의 권한과 대학별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 법안은 국립대 법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성회 직원의 포괄적인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락시키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은 그야말로 꼼수와 책임 전가의 완결판인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재정회계법 통과가 "시급한 사안"이므로 이번에는 국립대가 일심단결해 먼저 통과를 시키고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당국도 기성회비 문제가 학생 운동에 불을 지피기 전에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의 대안은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회계법 통과 시도와 노동자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 국공립대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승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2012년 2.0퍼센트, 2013년 2.8퍼센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야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을 보건대 이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20면 관련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게다가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는 안심할 처지가 못 되고, 따라서 민간 소비가 늘어나리라는 정부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2013년 상반기 가계부채는 9백80조 원으로, 2009년보다 2백조 원 넘게 늘었다.

물론 2013년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는 2012년 말보다는 둔화됐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백29퍼센트에서 2011년 1백35퍼센트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백37퍼센트로 증가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늘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가계 부채가 크게 는 것은 IMF 경제 위기 이후 가계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1]에서 보듯이, 1997년까지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010년까지 기업소득 증가율은 그 전 시기의 곱절이 된 반면, 가계소득 증가는 4분의 1 토막이 난 연평균 2.3퍼센트에 불과했다.

기업 양극화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더 많은 이득을 취해 왔다.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높은 점이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량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기업들의 상황도 양극화되면서 위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2008년 위기 이후 그러저럭 버텨 온 일부 재벌조차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표2]에서 보듯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상장 기업들의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개념과 같이 않고 통상적인 의미이지만, 기업 수익성을 보여 주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포함하면 2011년 5.7퍼센트에서 2012년 5.2퍼센트로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2012년에 3.9퍼센트로 크게 낮아졌다.

이런 상황은 2013년에도 계속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상장사 중 5백1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상반기 매출액은 2012년 같은 기간보다 2.35퍼센트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55퍼센트, 순이익은 2.59퍼센트 늘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개선은 '삼성전자 착시현상'에 기인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5백 개 기업의 2013년 상반기 실적은 오히려 2012년보다 크게 나빠졌다.([그림] 참조)

매출액은 2012년 상반기보다 0.47퍼



노동자 쥐어짜기로 그러저럭 버티던 한국 경제에 서서히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위기 전가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표1] 가계·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기간	국민총소득	가계	기업
1975~97년	8.9	8.2	8.1
2000~10년	3.4	2.3	16.5
2005~10년	2.8	1.6	19.1
2010년	5.5	2.5	26.8

자료: 금융위원회, <국내의 금융·경제 여건 및 금융 정책방향>(2011.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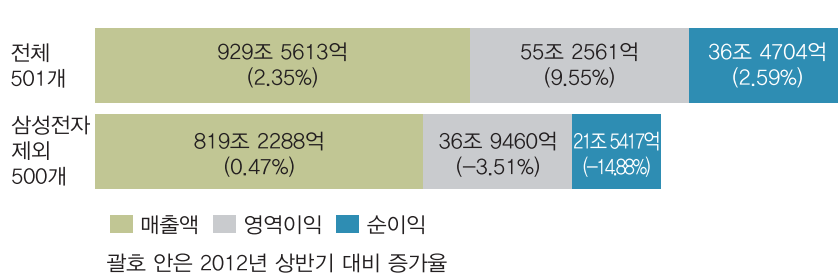
[표2] 상장 기업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단위: 퍼센트)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상장사 전체	삼성전자, 현대차 제외	상장사 전체	삼성전자, 현대차 제외
2010년	18.6	18.0	7.4	6.9
2011년	6.3	5.8	5.7	5.1
2012년	5.0	3.7	5.2	3.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FnGuide(2012년 기준 683개 기업)

주: 1)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2)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그림] 2013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



[표3] 한국의 복지예산 추이(7개 부처 총복지예산 기준)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본예산	추경	
정부 총지출 (조 원)	284.5	292.8	309.1	325.4	342.0	349.0	355.8
복지예산 (조 원)	74.6	81.2	86.4	92.6	97.4	99.3	106.3
복지 증가율 (퍼센트)	10.2	8.8	6.4	7.2	5.2	7.2	7.0(9.1)*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율 (퍼센트)	26.2	27.7	28.0	28.5	28.5	28.5	29.9

*: 괄호 안은 2013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센트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51퍼센트, 순이익도 14.88퍼센트나 급감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게다가 스마트폰 판매도 점차 한계에 부딪히면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웅진·STX·동양 같은 재벌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2014년에도 건설·조선·해운·철강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동부·한진·현대·동국제강·두산 등의 재벌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

재벌의 부도는 가계부채 증가·부실화와 함께 한국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해외 자금 이탈 같은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또, 현대중공업처럼 그동안 버텨 온 조선업계나 GM·르노삼성처럼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긴축 강화

한편,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정부 예산안은 3백55조 8천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해 추경예산 3백49조 원에 비해 고작 2퍼센트(6조 8천2백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3.7~3.8퍼센트)만큼도 늘리지 않은 것이다.([표3] 참조)

게다가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 등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할 작정이어서, 공기업 투자도 줄 공산이 크다. 2012년에도 SOC 담당 공공기관들은 2011년에 견줘 투자를 4조 원 넘게 줄인 바 있다. 이렇게 정부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함께 보면, 2014년의 정부 예산 방향은 분명한 긴축 기조이다.

복지 예산을 예년 증가율과 비슷하게 7퍼센트 늘렸지만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조연금에서 보듯 대상자 확대를 제한하

거나 지원 단가를 동결한 "반(反)복지적 예산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짜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렇다.

- 1)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위험에 대처한다.
- 2)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삭감해 민간 부문의 임금도 억제한다.
- 3) 위험 기업들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해 뒤야만 더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긴축 계획을 한결 같이 추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정과 중국의 경기 둔화, 국내 가계부채 위험과 한계 기업의 증가 등으로 만일 한국 경제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기업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미국이 실시한 통화팽창 정책(양적완화)이 종료되는 전환점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크게 높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양적완화 축소의 여파가 한국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도, 신흥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가 미칠 영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자를 더 쥐어짜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절박함도 훨씬 커졌을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보건대 지배자들의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도 터져 나올 공산이 크다. 수년간의 임금 동결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졌고, 철도 파업 등의 여파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높여 줬을 것이다.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동전가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해야만 천대받는 소수자들의 조건과 정치적 민주주의도 방어할 수 있다.

강동훈